

제2177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조봉환 이사장 “찾아오는 전통시장 만들 것” 18



정지원 이사장 “코스피 퇴출제도 개선” 15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日 인맥 총동원... 귀국 미루고 해결책 모색

11일까지 '반도체 소재 확보' 총력  
대형은행 등 회동 '간접지원' 논의



일본을 찾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귀국을 11일로 미룬 채 일본 정부가 거래 규제 대상에 올린 반도체 첨단소재 3종(에칭가스·포도레지스트·플라이미드)의 거래선을 찾아 바빠 움직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1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까지 포기한 채 현지에서 머물기로 한 것은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고, 파국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 속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로 재계는 해석한다. ▶관련기사 3·10·14면

9일 재계와 TV아사히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1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일본의 메가뱅크와 반도체 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 대형 은행들은 자국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일각에서는 한·일 갈등으로 일본계 은행이 한국에 둔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가 열리는 10일 이전에 귀국할 가능성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30대 총수 간담회 불참을 양해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해결 방안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회장은 현재 재계 관계자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요네쿠라 히로마사 스미토모화학 회장이 거론된다. 스미토모화학은 반도체 공정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시

오지로 우시오전기 회장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의 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부회장이 거래처 기업 간부를 만나 일본 이외의 공장에서 한국으로 소재 조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는 에칭가스 생산공장이,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에 현지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3국에서의 소재 조달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 측은 “구체적 동선과 일정은 이 부회장만 안다”며 말을 아꼈다. 재계 관계자는 “부친인 이건희 회장 때부터 구축한 일본 재계 인맥을 통해 현지 원료와 기업인 등을 만나 최근 사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면서 조언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장 해법을 찾기 어렵겠지만, 총수가 귀국을 미룬 것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했다.

김문호 기자 kmh@ · 배준호 기자 baejh94@

## 文대통령, 오늘 기업 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해법 찾는다

대기업 30개사 총수들과 만나  
성윤모 “12일 한·일 실무협의”  
日 부정적 자세...전망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하는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크게 산업통상 분야와 외교 분야로 나눠 대응하는 가운데 민관 공조를 강화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의 규제 철폐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12일 한·일 정부의 첫 양자 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양자 협의의 날짜를) 12일 오후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양국 간 첫 만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거듭된 양자 협의 요구에 8일 주일 대사관을 통해 ‘협의의 날짜를 논의하자’는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협의의 대표로는 전략물자 담당 실무 간부인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이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이 파견될 가능

성이 높다. 일본 정부가 비타협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의를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자리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설명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이번 협의에서 자국의 수출 규제는 금수(禁輸) 조치가 아닌 무역 관리 재검토 조치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성 장관은 일본산 불화수소(에칭가스)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 등 우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크 니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현안을 논의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르르면 다음 주 미국을 찾는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모두 동맹”이라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성과를 내지는 불투명하다.

김서영 기자 ojung2@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

7월 9일(화) 11:00 ~ 11:30 / 주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그동안 기뻐왔던 상승폭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더이상 감당 못해”...경제계 “최저임금 삭감” 호소

내년도 '8000원'으로 하향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이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관련기사 4면

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4.2%로 제시했다. 사용자단체들은 “깊은 고민 끝에 제시한 숫자라서 현재로서는 조정하기 힘들다”며 “지난 2

년간 과도하게 인상돼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고선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중요한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최대치는 통상 중위임금 60%로 이해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절대액, 인상률, 중위임금 대비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 방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마이너스가 되면 내년 내수는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통계를 보면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했고, 현장 고용이 줄고 기업이 해외로 옮기면서 고용과 질 모두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

공정위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文 “시범적용후 민간 확산해야”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다. 소비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사용 약관을 손질하고, 공공기관이 거래 협력업체(원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도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한 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그동안 전기·가스·수도·주택 등의 분야를

독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민간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와 공공시설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 맺는 공공기관과의 거래조건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거래 협력업체에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각종 위험·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관행도 근절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시 거래 빈도, 조건,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저가격, 평균가격 등을 적용토록 했다.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 일괄 부담토록 하는 특약 명시도 사라진다.

세종·서병문 기자 sbg1219@

# 삼성전자 '脫일본' 가속도... 반도체 소재 기술 키운다

## 미래기술육성사업 연구지원 과제 발표

소재·디스플레이·로봇·헬스케어 4개 분야서 15개 선정  
"日 제재,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도움 될 것"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 투자한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핵심 소재의 '탈(脫)일본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9일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 1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혁신적인 반도체 소재 및 소자·공정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컨슈머 로봇 △진단 및 헬스케어 솔루션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온 이동을 이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100층 이상 집적하기 위한 신규 소재 △다이아몬드 이동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등 반도체 소자 구조와 소재를 획기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과제 6개를 집중 육성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연구과제들을 선정했다. △OLED 청색 발광 소재의 효율 한계 극복 △홀로그래픽 공간 변조 기술 연구 △나노와이어 기반 마이크로 LED 연구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2013년 국가 미래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1조5000억 원을 출연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시작했다. 기초과학, 소재, ICT 분야의 '자유공모 지원과제'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선정하며, '지정테마 지원과제'는 연 1회 선정한다.

'지정테마 지원과제'는 2014년부터 해마다 발표되어 왔지만, 올해 과제 선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맞물리면서 남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지정

##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 리스트

### 혁신적인 반도체 소재 및 소자·공정 기술

- 디락 반금속 기반 초고속 저전력 X-Point 비휘발성 메모리: 박기복(UNIST)
- 비(非)단결정 이종접합 기반 저차원 전자 기체 소자 구현 및 응용: 박태주(한양대ERICA)
- 게이트 스택의 물성 및 구조 변조를 이용한 비(非)전하 저장형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윤태식(영지대)
- 사방정계 HfO2 기반 강유전체 박막과 CAAC-IGZO 채널 재료를 적용한 3D V-NAND Flash 요소 기술 및 아키텍처 개발: 송윤홍(한양대)
- 차세대 3D Fe\* NAND 구현을 위한 ALD 공정 기반 강유전체 트랜지스터 개발: 이장식(포스텍)
- 다공성 다이아몬드 기반 열적 메타물질을 이용한 고발열 전력반도체 임베디드 열관리 기술 개발: 이형순(중앙대)

### 차세대 디스플레이

- 프로그래머블 초고정확도 비점축 어셈블리 기반 5000ppi급 마이크로 LED디스플레이 연구: 김재균(한양대ERICA)
- 청색 형광 OLED 효율한계(ηQE 40%) 극복을 위한 초고효율-차세대 형광 발광재료 개발: 김태경(홍익대)
-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를 위한 능동 복소 공간 광 변조기: 김휘(고려대세종)
- AR/VR용 Micro LED를 위한 초박형 메타렌즈 개발: 배덕규(핵사솔루션)
- QD-LED 소자 성능 향상을 위한 소자 내의 electronic trap 분석 및 원인 규명: 황규원(KIST)

테마 지원과제에서 반도체 소재와 디스플레이 과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서다.

삼성전자는 산업계와 학계 추천을 통해 매년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기술 분야를 찾아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 모두 반도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R&D)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정테마는 △차세대 통신과 융복합 기술 △차세대 센서 소재와 소자 분야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D램 약 70%, 낸드플

래시 약 50%로 독점에 가까운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약 50%, 장비 국산화율은 18%에 머물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로 정부 차원에서의 소재 산업 집중 육성, 규제 완화, 삼성과 같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주도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재의 탈일본화를 서두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미래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며 "새로운 분야를 열거나, 난제를 해결하려는 큰 목표에 도전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소재와 디스플레이 외에도 '컨슈머 로봇' 분야에서 로봇 피부로 압력, 온도, 거리, 진동 등을 감지하는 말초신경계 광섬유센서 개발 등 2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진단 및 헬스케어 솔루션' 분야에서는 미세먼지를 크기와 종류별로 구별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기술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신학철 "日 제재, 당장은 영향 없지만 시나리오 만들어 대비"

〈LG화학 부회장〉

신학철(사진) LG화학 부회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은 당장 없으나 향후 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한 상황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일본 수출규제 품목이) 반도체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다"면서도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 플래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 부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

제가 확대될 경우 이미 다각적으로 원자료를 조달하고 있는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부회장은 "자동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소재에 대한 것은 이전부터 내재화하거나 원료·지역 등을 다각화해 왔다"면서 "통상 한국, 일본, 중국 또는 경우에 따라 유럽에 있는 2-3개 업체에서 소싱(조달)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이미 핵심 소재에 대한 내재화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배터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車 전지 소재 이미 다각화 매출 59조까지 끌어올려 5년 내 '글로벌 톱5' 도약"



의 경우 현재 정주·오창 라인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구미 공장에서 이를 생산할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국내 양극재 캐파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신 부회장은 LG화학의 매출을 향후 5년 내 59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영업 이익률도 두 자릿수를 달성해 '글로벌 톱 5 화학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전지를 중심으로 전지사업의 매출을 전체의 50% 수준인 31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석유화학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현재

60%에서 30%대로 낮춰 보다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별 매출 역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시장의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현재 20%수준에 불과한 미국과 유럽지역의 매출을 40%이상까지 높일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14%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할 예정"이라며 "전지사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건 맞지만 석유화학, 첨단소재, 바이오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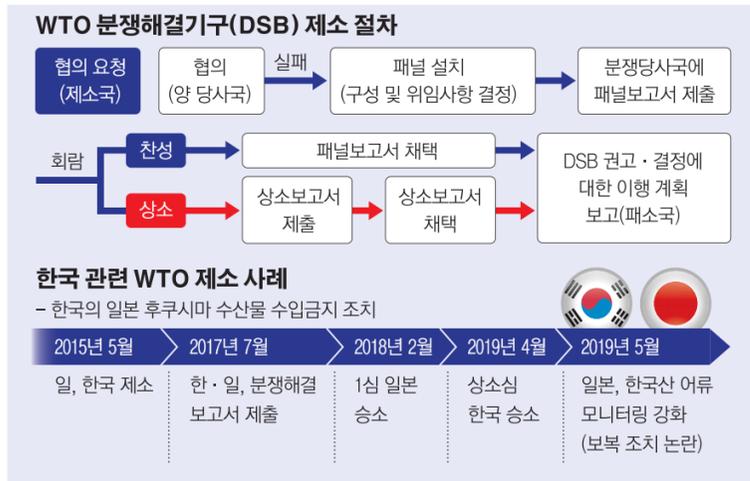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 및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AMI, ESS, MICRO GRID, SMART ENERGY CITY, SOLAR FARM, WIND POWER, K-SEM, EV

한국전력공사 KEPCO

# 韓 “수출규제 즉각 철회를” vs 日 “안보상 필요한 조치”



## WTO 이사회서 격돌... 사실상 첫 라운드 '국제사회 우군 확보' 총력... 치열한 공방

한국과 일본이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맞붙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공론화,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각자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사실상 첫 라운드였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8일부터 9일 까지 이틀간 이사회를 열었다. 한국에서는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백지아 대사와 산업부 정경록 세계무역기구과장이 참석했다.

백 대사는 이사회 이틀째인 9일 모두발언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날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최와 동시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인 호세 루이스 칸셀라 고메즈 우루과이 대사에 설명, 이 문제를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하는 데 성공했다.

백 대사는 일본 측의 수출 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 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 같은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이 올해 주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백 대사는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크게 교란시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국 측의 공세에 일본 측도 반박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안보상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어필했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WTO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되는 규정이 있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 4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WTO 제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1차적으로 분쟁 당사국이 상대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10일 안에 피제소국이 응하면 3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60일 내에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만일 여기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는 패널은 양국으로부터 서면 보고와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 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 보낸다. 보고서에 대해 당사국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서로 반박문을 보내고 재검토를 요청, 패널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럼에도 불만이 있으면 상소할 수 있다. 패소국은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권고 또는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국이 피해에 상응한 ‘보상, 보복조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반도체 中企 10곳중 6곳 “6개월 이상 못 버틸 것”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59%의 기업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수출 규제를 3개월 미만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기업은 28.9%, 3-6개월 감내할 수 있다는 기업은 30.1%로 나타났다.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9.9%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자체적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46.8%의 업체가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즉, 관련 중소기업들이 현 상황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인 42%,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응답 역시 34.9%로 높게 나타났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뿐이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트럼프 침묵... “3국 협력해야” 원론적 답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에 대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대 도전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라며 “북한에서 비롯된 문제를 포함해 역대 도전과제와 인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 사안들에 3개국이 직면한 가운데 한·미·일이 양자 또는 3자 간 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한·일 모두 동맹이자 친구” “美·中 IT산업 얽혀 신중”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국 간 협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에 여전히 단합하고 있다”며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 항상 우리 3개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핵 문제 대응이라는 최대 과제를 내세워 한·일 간에 벌어진 무역 갈등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 규제가 미국, 중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미국 정부가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양대 업체가 생산 차질을 빚으면 미국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도 한·일 갈등에 미국 정부가 행동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꼽았다. 이전 미국 정부는 북한, 중국에 맞설 카드로 한·일 양국을 중시해 전통적으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개입해왔으나 트럼프는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여름 맞이 시원하고 편안한 기차여행!

레일 호(好) 캠퍼스

<p>아스티 호텔</p> <p>가제! 부산 야경 이바구</p> <p>(2인기준) 293,600원</p> <p>예약하기</p>	<p>호텔탑스텐</p> <p>동해바다 힐링 위의 힐링 TOPS 10</p> <p>(2인기준) 180,000원</p> <p>예약하기</p>	<p>영산재 한옥호텔</p> <p>2감만족 한옥호텔 체험</p> <p>(인기준) 163,800원~</p> <p>예약하기</p>
---	--	--

지금 바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더 다양한 호캠퍼스 상품을 확인하세요!

# 파행 거듭 최저임금위... 결국 공익위원안대로 결정?

경영·노동계 번갈아가며 불참 속도조절론에 3~4% 인상설 제기 공익위원들 정부 입김 받들 듯 정부 “심의 15일까지 종료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이 앞서 두 차례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현 대립구

도가 이어진다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 주도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불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적

어도 11일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임금 수준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 줄어든 80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9.8% 인상된 1만 원을 제시했다.

이번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노

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맞으면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한 데 이어 정부 부처 장관들도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월 KBS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2년간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일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3~4% 인상설이 불거진 바 있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상의 찾은 興 원내대표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환담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복지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아들딸 차별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자녀 성별에 따른 차별이 폐지된다. 현재 혼인한 아들을 둔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양비를 적용받아 수급자 선정이나 생계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혼인한 아들은 30%, 혼인한 딸은 15%로 돼 있는 부양비를 맞추고 그 수준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대해선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특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와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부양능력 미약’으로 평가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대신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정 비율(부양비)이 소득 이전으로 간주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더해진다. 늘어난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 시 반영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비만큼 급여액을 덜 받는다.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5~

30%’다.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미혼이면 아들딸 모두 30%가 적용되나, 혼인한 경우엔 아들은 30%, 딸은 15%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아들이 주로 부모를 부양하던 제도 도입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됐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고, 부모 부양이나 생활비 지원에 아들딸 구분이 사라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혼인한 아들딸의 부양비를 맞추고 그 수준도 1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부양비만 맞추면 딸을 둔 수급자는 혜택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부양비가 낮아지면 소득인정액이 준다. 선정기준 경계의 가구는 새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이 늘어난다. 기존에 불이익을 받던 아들을 둔 가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능력 미약자를 자녀로 둔 가구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경계에 있는 가구가 적고, 부양비 변동도 1만 원 안팎이라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50만 원 안팎의 생계급여로 생활을 유지하는 1인 가구 수급자들에게 1만~2만 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TV에 게재했습니다

## 한미 FTA 발효 후 첫 경쟁협약...주제는 ‘퀄컴 제재’

공정위, 라이선스 강요 혐의 퀄컴 1조300억 과징금 퀄컴 “방어권 보장 못 받아” 불만... 美서 협의 요청

국내 공정거래법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한미 통상당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국 통신기업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미국 측의 협의 요청 배경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부는 9일 서울에서 경쟁 협의를 열었다.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협의 요청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USTR가 문제 삼는 대목은 피심자의 방어권이다.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사건 기록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이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사건 기록 접근을 제한하지만 사법 단계에선 접근을 허용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퀄컴 제재에 제동을 걸기 위해 USTR가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퀄컴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려왔다는 점에서도.

퀄컴은 2016년 특허 기술을 무기로 한국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1조300억 원과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

돈 로젠버그 퀄컴 부사장은 공정위 결정 직후 한미 FTA에서 보장하는 보호 조치를 적용받지 못했다며 “한미FTA에 따라 미국 기업들에 보장돼 있는 증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심의기일에서의 반대신문에 대한 권리 등 절차상의 보호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직접 퀄컴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직접 맞설 방안은 없다. 국제 규범상 경쟁법으로는 강제력을 가진 FTA 분쟁 해결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오충중 산업부 한미FTA대책과장은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우호적으로 대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협의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이강래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서두를 것”

수납원 직접고용 요구에 “불가능” 이강래(사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연내 가능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요금수납원 1460명이 10일 넘게 서울영업소 캐노피를 점거하고 서울특별시와 청와대 앞에서 노숙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896명)는 직접고용이 완료됐으나 요금수납원은 1년여간의 노사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올해 7월 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요금수납원 5100여 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1400여 명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환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법원에서 도로공사가 그동안 용역 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외주한 것에 대해 합법적 도입이나 불법적 파견이나를 놓고 소송 중이고 일부 2심에서는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장은 “도로공사에서 요금수납업무가 모두 자회사로 넘어가 직접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승소 시 요금수납 업무는 불가하고 청소 등 조무업 업무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특히 “자회사에 대해 또 다른 용역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영업소장을 요금수납원이 맡는 등 독자적인 독립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건강보험료 안 낸 외국인 의료혜택 정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선 급여 혜택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는 내용의 모법 개정안이 16일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개정 모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진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상

실 시기와 보험료 체납 시 보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먼저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를 신청하면 당일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정산될 때까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간 중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등은 비용 총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국인도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가 정지된다”며 “기본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취지가 보험료를 제때 내고 혜택을 받으라는 건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별개로 보험제도 운영상 징수를 독려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문 대통령 “공정거래 원칙 준수, 임직원 성과 평가 반영”

“공공기관, 공정경제 실현 마중물로서 모범 보여야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의 거래 조건은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 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성과 창출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성과보고 회의’로 변경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며 “입법과제까지 이뤄져야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라며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혁신성장 등 ‘3축 경제정책’ 중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집행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

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포용 속

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며 “시장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만들어진다”고 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 “청문보고서 채택” vs “자진 사퇴해야” 여야, 윤석열 ‘적격성 공방’

여야는 9일 윤석열(사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으로서 윤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야당은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도읍·김진태·이은재·주광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를 비롯한 일련의 그룹이 형성된 검사들에 의해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는 불가하다”며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거짓 진



술’ 논란을 적극 부각 시켰다. 윤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와 상반된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우물쭈문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커녕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막판에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건 사실이라고 말을 바꾸며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했다”며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종일 거짓말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유성엽 “소득 늘리려면 감세해야”

###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성엽(사진) 민주당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 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며 “반드시 나태하고 방만한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롯데칠성음료**

**WORK LIFE BALANCE**

빅사이즈 커피로 지킨다

NEW

우라발을 살리는 빅사이즈 커피

**500ml**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 한발 멀어진 美 금리인하 투자자들 증시서 돈 뺏다

비농업 부문 고용 깜짝 증가  
美 주요 경제지표 호조에  
연준 금리인하 불확실성 커져  
글로벌 머니 미국채로 몰리며  
세계 주요 증시 일제히 하락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5.98포인트(0.43%) 하락한 2만 6806.14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날보다 14.46포인트(0.48%) 하락한 2975.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3.41포인트(0.78%) 내린 8098.38로 각각 장을 마쳤다.

같은 날 일제히 급락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9일에도 약세를 이어갔다. 한국 코스피지수는 한일 경제 갈등 여파까지 겹치며 0.58% 하락한 2052.03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0.14% 오른 2만1565.15로 겨우 하락세만 면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928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난주만 해도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훈풍이 불었지만 지난 주말 발표된 미 경제지표 호조가 되레 약재가 됐다. 경제지표가 좋은 상황에 연준이 굳이 금융 정책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시장 예상을 대폭 웃돌았다.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2만4000개 늘어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6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하는 6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석 달 만에 반등했다. 뉴욕 연은이 조사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조사 때의 2.5%에서 0.2%포인트 올랐다. 향후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7%로 올랐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2.6%를 기록했다.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연준이 이

달 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를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100%이지만, 5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 기대는 크게 후퇴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구나 미국 경기가 미국 역사상 최장기 확장세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향후 경기 둔화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엔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미국 경기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 이후 121개월째 확장세를 지속해 사상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제품 파열 연준 의장은 10일과 11일 의회 증언에 나선다. 여기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파열 의장이 시장의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를 경계할 것인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국채로 몰렸다. 증시에 '연준 리스크'가 생기면서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미국채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정부가 발행한 화폐 및 채권 매각 금액은 약 1조 달러에 달했는데, 뮤추얼펀드 등 투자 펀드들이 연준 매입분을 제외한 국채의 54%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애플에 등 돌리는 월가

아이폰 판매·개발 둔화 우려  
올들어 '애플 회의론' 고개  
22년 만에 최다 '매도' 의견

애플의 앞날에 짙은 전망이 가득하다. 그동안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관대했던 월가마저 '애플 회의론'에 무게를 실기 시작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젠블랫증권은 이날 아이폰 사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

주장 로젠블랫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판매 부진과 다른 제품 개발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애플은 향후 6~12개월 사이에 펀더멘탈 약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젠블랫까지 애플의 앞날을 비판하면서 애플 전담 애널리스트 57명 중 '매도' 의견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이는 1997년 이후 최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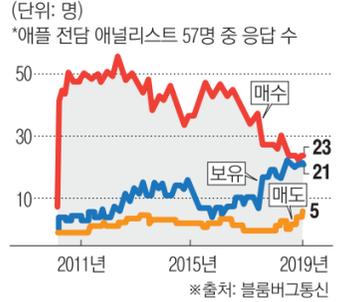
애플에 대한 회의론은 올해 들어 유독 강해졌다. 5건의 '매도' 의견도 모두 올해 나왔다.

지난 4월 뉴스트리트리서치와 HSBC가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 1월에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매수' 의견이 50% 이하를 밑돌았다.

블룸버그는 아이폰 시리즈 수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러한 회의론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애플 매출의 60% 이상이 아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추이



폰에서 나왔는데, 이중 20%정도가 중국 시장에서 창출됐다. 지난주 씨티리서치는 애플 선호도 하락으로 애플의 중국 판매가 절반으로 줄어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애플은 올해 1월,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폰 판매 부진을 이유로 매출 전망을 낮췄다. 애플의 2019 회계연도 3분기 실적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로젠블랫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이날 애플 주가는 2.06% 하락 마감했다.

한편 포브스는 애플이 폴더블(접이식) 아이패드를 개발 중이라고 8일 보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20년 출시 예정인 듀얼 디스플레이 버전 '서피스'의 대항마로 폴더블 아이패드를 개발 중이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발표했으나 출시 직전에 취소됐고, 화웨이테크놀로지도 유사 제품인 '메이트X'에 대한 출시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이 선수를 칠 수도 있다고 포브스는 전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성난 황소를 피해 달리는 사람들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산 페르민 축제가 열린 가운데 9일(현지시간)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성난 황소들을 피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팜플로나에서는 도시 수호 성인인 성 페르민을 기리기 위한 대규모 소몰이 행사인 산 페르민 축제가 매년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사나운 황소들이 전통 골목을 질주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소를 피해 달리는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팜플로나/EPA연합뉴스

## 수렁에 빠진 中경제

2분기 GDP 증가율 6.2%로 후퇴... 통계 사상 최저치  
美와 무역협상 결렬되면 관세 제재 확대 우려 경고음

중국이 다시 경기둔화의 수렁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일(현지시간) 중국 전문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정치가 평균 6.2%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GDP 증가율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4%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전망이 맞다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은 6월 말 협상 재개와 추가 관세 보류 등 무역 전쟁 임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무역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전체 중국 GDP 증가율 전망치도 6.2%로, 3월 조사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20년 6.1%, 2021년 6.0%로 완만하게 성장이 감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유지했다.

경기 하강으로 이어질 리스크에 대해서는 유효 응답자 15명 중 12명이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1위로 꼽았다.

초상증권의 셰야센은 "무역 분쟁이 기술 분야에까지 이르면 올해 후반 하이테크 산업이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고 말했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의 원제는 "무역협상이 하반기 최대 변수"라며 "미중이 연말까지 일정한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55%로 보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금융시장이 크게 변동하고 중국의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를 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거의 모든 중국 제품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넓히는 '제재 4탄' 카드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 DWS의 선 테일러는 "무역협상이 결렬돼 '노 딜(No Deal)' 상황이 펼쳐지면 중국은 수출이 감소하고 관련 기업이 더 많은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성장률이 5% 안팎으로 추락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중국 경제 비판론에 합류했다. 블랙록은 전날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도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능력에 대해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중국 및 중국과 연결된 신흥시장 주식 비중을 하반기에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록은 1개월 전만 해도 "중국 경제 개혁과 경기부양책이 증시를 지탱할 것"이라며 신흥국 증시에 낙관적 견해를 제시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美 헤지펀드 거물' 엡스타인, 미성년 성매매

유죄 인정되면 최장 45년 징역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억만장자인 제프리 엡스타인(사진)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8일(현지시간) 기소돼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엡스타인은 이미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지난 6



일 20여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한 혐의로 뉴저지 테더보로 공판에서 체포됐다. 엡스타인을 기소한 뉴욕 연방 검찰은 "뉴욕 맨해튼과 플로리다 팜비치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미성년 소녀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이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0jung2@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 짜

: 사회와 기업이 단짜이 되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짜짜짜' 박수 받음을 뜻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짜' 지어, 더욱 박수 받는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행장추천위원회〉

# 기업銀, 행추위 신설 움직임... '낙하산 인사' 사전 차단

### 공정한 차기 행장 선임 위해 이달 중 정관 변경 본격 추진 금융위, 임명제청권 약화 우려 부정적... 최종 인가 관건

IBK기업은행 내부에서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신설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올해 12월 김도진 행장의 임기 만료에 앞서 정관계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입김에서 벗어나 자행 출신의 행장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뽑겠다는 의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9월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행추위 신설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7월 중순에 이뤄지는 은행 내부 인사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행추위 신설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공식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조준희·권선주 전 기업은행장 선임 당시에도 행추위를 통해 행장 추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행 출신 인사들에 대한 내부 평가도 진행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행장의 조건을 조사했다. 노조는 올해도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직원들이 원하는 행장이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행추위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이 행추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수 요건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정관 개정에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 행추위 신설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행추위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행장 임명제청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행장은 금융위가 제정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기업은행 내부 행추위에서 행장을 추천할 경우 금융위 제청권에 힘이 빠지게 된다.

이같은 구조 탓에 매년 차기 행장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나왔다. 조 전 행장과 권 전 행장을 거쳐 김도진 행장까지 3연속 내부 출신 은행장이 나왔지만, 이전에는 관료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은행장 자리에 속속 내려앉았다. 최근 차기 행장으로도 정

은보·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허마평에 오르는 것도 이같은 선례 때문이다.

내부 직원들은 행추위 신설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위 결정으로만 행장 후보가 추려지면서 행장 선임에 내부 직원들의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 과정을 위해 행추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장 추천 과정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딱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 "기업은행 정관 개정과 관련된 사항도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금융위 제정을 거쳐 청와대가 최종 임명하는 행장 선임 과정이 동일하다. 이와 달리 시중은행은 모두 자행 내부 기구를 통해 행장을 선임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5년 신설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016년 신설된 지주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임추위에서 행장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결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금융당국 눈치 보는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줄줄이 철회

### 금융인사이드 규제 샌드박스 선정했지만 상품 활성화 당국 취지 역행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지원 사업으로 출시한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연달아 자진해서 철회하고 있다. 상품 활성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당국의 지적과 업계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온오프(On-Off)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앞서 DB손해보험 '건강나이보험', 신한생명 '덴탈케어보험'에 이어 당국 지원 사업 관련 세 번째 철회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독창적인 보험 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상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효과도 특목히 볼 수 있어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신청 후 스스로 철회하는 일이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농협손보의 온·오프 해외여행보험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시됐다. 특정 기간 내 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

농협손보가 들은 취소한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지적 때문으로 전해진다. 농협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타당하지에 대한 타업체의 질의에 대해 금융위는 상품 활성화 취지로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데 대해 독점권 부여

는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받는다면 함께 지정받은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의 보험사 협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농협손보도 이 같은 이유로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B손보가 업계 처음으로 내놓은 건강나이보험인 '프로미리아프건강해저참좋은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이 상품은 금융당국이 고령층의 신체(건강) 나이를 따져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개발됐다.

당국이 이 같은 취지에서 보험개발원을 통해 참조요율을 산출했는데, DB손보가 이를 토대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가 쓸 수 있도록 내놓은 참조요율을 토대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데 대한 당국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한생명의 '덴탈케어보험'도 당국의 건강증진형 활성화에 발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들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배타적 사용권으로 인해 다른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가 막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 신한銀,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신한은행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출산·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출산과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 △여성과 아동 등 대상별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공개강의 지원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예방 캠페인 및 토론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대응에 함께 힘을 합치게 됐다. 이병철(앞줄 우측에서 다섯 번째) 신한금융그룹 브랜드홍보부장과 신인형(여섯번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이날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출산·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출산과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 △여성과 아동 등 대상별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공개강의 지원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예방 캠페인 및 토론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대응에 함께 힘을 합치게 됐다. 이병철(앞줄 우측에서 다섯 번째) 신한금융그룹 브랜드홍보부장과 신인형(여섯번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이날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 신협, 목표 기금제 도입 "예금자 보호기금 안정성 제고"

신용협동조합(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에 목표 기금제가 도입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처럼 신협도 예금자 보호 기금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목표 기금제는 예금자 보호 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규모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 요율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목표 기금제를 도입하면 각 조합의 출연금 부담이 줄어들어 그만큼 조합의 가용자금이 늘어난다. 금융위는 기대 효과와 관련해 "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의 안정성, 효율성,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의결안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주체 변경안이 포함됐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이사회가 임직원을 제외하고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과 공직선거 등 선거 관리전문가 가운데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현재는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김기홍 "지주-계열사 협업 디지털 강화"

### JB금융 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

김기홍(사진) JB금융그룹 회장이 현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JB금융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현행 금융 관련 제도와 법규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맞도록 지주사와 계열사 간의 역할을 확실히 나눠 디지털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미래 금융 트렌드에 부응하며,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플랫폼 관련 직원들을 각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인력 재편을 완료했다. 앞서 김 회장은 취임 후 100일간 JB금융그룹의 핵심 가치 확대 등 주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경영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지주사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가져왔다. 4월 취임 직후 지주사 '조직슬림화'와 '핵심 기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주사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사와 자회사 간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한편, 자회사의 자율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룹의 경영체계를

정비했다. 지주사는 기존 4본부 15부에서 4본부 10부로 축소됐고 지주사 인원도 30%가량 감축됐다.

김 회장은 6월 지주사 및 계열사 임원들과 함께 책임경영의 지를 다지는 한편 미래 경영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앞세워 자사주 약 33만 주를 매수했다.

김 회장은 기업문화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직된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와 보고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월례회의와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월례회의를 통해 JB금융그룹의 비전 및 경영전략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직원들의 고충이나 의견을 듣고 직접 답변을 해주는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내부 보고 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고를 위한 보고는 지양하고 대면보고도 최소한으로 한정하되, 사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실시간 보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고 강한 '강소 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객진산 기자 jinsan@

##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 6500억 회수 난항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재판에서 패소해 6500억 원에 달하는 캄보디아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게 됐다.

예보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이 모 씨가 은행 파산 뒤 예보 몫이 된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반환을 청구하려며 2014년 제기한 것이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추진한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에는 월드시티 법인을 설립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 8000여 명에 달했다.

부산저축은행 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 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는 "공사 측의 패소가 시행사측에 대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6년 7월 대법 대여금청구소송 및 2017년 1월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모 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레이크힐스순천CC 전경(왼쪽). 작년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충남 천안의 버드우드CC 회원들이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레이크힐스순천CC·버드우드CC 비상대책위원회

- **레이크힐스순천CC**  
 2018.2 골프존카운티와 조건부 인수계약 MOU, 회생절차 개시 신청  
 3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4 레이크힐스 순천, 골프존카운티와 인수계약 체결  
 5 회생절차 종결
- **양평TPC**  
 2017.11 유안타증권과 600억 원 차입 MOU  
 2018.3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5 회생계획안 인가  
 6 비상대책위, 고등법원에 인가 결정 항고 고법, 기각  
 9 남은 비대위 7명, 대법원에 재항고  
 12 회생절차 종결
- **버드우드CC**  
 2018.5 리딩투자증권과 350억 원 차입 MOU  
 4번째 회생절차 개시 신청  
 7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11 회생계획안 인가  
 비대위, 서울고법에 항고

# 모래성 같은 '빛의 산물' ... 고객은 사실상 채권자였다

## 기업회생 보고서

### 14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은 1990년대 '성장세일주의', '외형확장주의'의 초상이다. 그즈음 전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회원들의 분양대금, 즉 빛에 의존하며 골프장들이 들어섰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듯, 빛이야 값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금융의 산물'인 만큼 회원제 골프장은 금융위기에 취약했다. 곧바로 부실로 이어졌고, 하나 둘씩 회생의 기로에 섰다.

1027억 원. 서울 소재 한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규모다. 입회보증금이란 한마디로 골프장 가입비다. 단 '보증금'인 만큼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 골프장이 망하면 입회보증금은 곧 갚아야 하는 채무로 뒤바뀌고, 골프장 운영의 핵심인 수많은 회원은 한순간에 채권자로 신분이 탈바꿈된다. 이 골프장의 전체 부채는 1211억 원이다. 전체 빛의 약 85%가 수없이 많은 회원의 주머니 사정과 연관돼있는 셈이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은 '채권자들의 바다'다. 골프장을 수놓은 수많은 잔디처럼,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골프장의 자산이 구성돼 있다. 그만큼 골프장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고, 회생절차까지 들어 갈 경우 가장 난관은 골프장 회원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다. 심지어는 그룹별로 나눠 서로 다른 회생계획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회생계획안으로 대결을 펼치는 셈이다.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골프장 법정관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돌파할 것인지 심도 있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중에 레이크힐스순천의 회생은 P-Plan과 스토킵호스 방식의 인가 전 제3차 인수-합병(M&A)가 결합된 방법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된 선구적인 사례로 꼽힌다.

◇ P플랜 - 레이크힐스순천CC = 지난해 2월 9일 레이크힐스순천은 하루 전 골프존카운티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탁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레이크힐스 순천과 골프존카운티가 약정한 인수대금의 적정성 등 공정성 확보

골프장 자산으로 분류된 입회비 회생절차 진행 땀 채무로 전환 유동성 위기 취약... 부실 뇌관

회생 모범 '레이크힐스순천CC' 갈등 최소화·기업가치 보호 등 P플랜·스토킹호스 방식 선택 회생 개시 47일 만에 인가받아

회생 약용 '양평TPC·버드우드CC' 재무제표보다 낮게 가치 평가 변제금 결정 공정·형평성 저해 영업 재개했지만 잡음 줄이어

를 위해 스토킵호스 매각 방식을 결정했다. 레이크힐스순천은 같은해 3월 2일 조건부 인수자로 골프존카운티를 선정하는 내용의 사전계획안을 제출한다. 3일 후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과정에서 강동그룹 컨소시엄이 730억 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했지만 스토킵호스인 골프존카운티가 인수대금 730억 1만 원을 제시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레이크힐스순천과 골프존카운티는 같은해 4월 6일 확정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주 후에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91.3%의 동의로 인가가 결정됐다. 회생법원은 5월 28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회생절차를 주관했던 법무법인 바른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기존 회생제도 대신 P플랜 활용을 결정했다. P플랜은 법원이 갚아야 할 빛의 규모를 빠르게 줄여 주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 조정 방식을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절차를 앞당겨 둘 사이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해 기업가치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크다.

바른이 회생개시 결정 이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내는 데까지 47일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던 이유다. 더욱이 바른 변호사들이 골프장 회원들과 채권자, 거래처들을 발로 뛰며 만나 설득한 결과였다.

특히 스토킵호스 방식 매각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원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영업은 기존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회원예약 및 부대 시설 이용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 'P플랜'의 그림자... 양평TPC·버드우드CC = 레이크힐스순천처럼 P플랜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되는 만큼 신속성이 보장되지만, 그만큼 채권자들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평TPC골프클럽(양평TPC)과 버드우드CC다. 둘 다 P플랜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두 골프장은 모두 대중제로 전환해 영업을 개시했지만, 잡음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회생절차를 약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양평TPC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2017년 11월 유안타증권과

600억 원의 자금 차입에 대한 투자 확약을 받은 뒤였다. 회생계획안은 2개월 만에 인가됐다. 당시 책정된 양평TPC의 존속가치는 860억 원. 하지만 이와 달리 양평TPC의 재무제표를 보면 회생절차에 들어 올 당시 자산가치는 1832억 원이었다. 가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버드우드CC도 마찬가지다. 버드우드CC는 2013년 이래 3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모두 인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5월 네 번째 회생절차 신청에서 버드우드CC는 리딩투자증권로부터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조건으로 약 350억 원의 자금 차입에 대한 투자확약을 받고,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사전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주채권자였던 일광제지개발은 출자전환을 거쳐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고, 회원들은 채무액의 30%만 현금·쿠폰으로 나눠 받았다. 하지만 버드우드CC도 존속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점이 뒤늦게 문제로 불거졌다. 회원들은 올해 버드우드CC가 과거 보유하고 있던 사천CC 주식을 실제보다 50억 원가량 낮게 평가해 청산가치를 낮추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기준가격이 중요한 것은 이를 기준으로 채무자들의 변제금액이 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회생업계 관계자는 "골프장 회생 사건에서 회원들의 변제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을 조정했다는 점은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 “회생법원 찾는 회원제 골프장 많아질 것” 부실 골프장 공개매각 진행 때 인수자에 부채 승계 대법 판결

올해 회생법원을 찾게 될 회원제 골프장이 많아질 전망이다. 부실 골프장에 대한 공개매각 시 부채가 인수자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형식(사진) 서울회생법원장은 본지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18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올해는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신청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회생법원장이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명 '베니치아CC' 사건이다. 베니치아CC 사건은 간단히 말해 골프장이 보유한 회원권 등의 부채가 인수자에게 승계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에 관해 담보 신탁계약이 체결됐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해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했다. 앞서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16년 4월 제3차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전 M&A로 진행되는 골프장 회생절차에서는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경우 인수자의 골프장 인수 부담이 커진다. 회원권 부채로 인해 회생절차로 들어오는 골프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개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회생법원의 판단이다. 공개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회생절차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형식 회생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의 법안회생연구반 등을 통해 청산가치 산정방식 보완, 신탁채권자와 회원권자들 사이의 형평성 보장방안 마련 등 골프장 회생절차 관련 회생절차 개선방안 마련하는데 힘을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삼성 '차세대 파운드리 사업' 속도 조절할까

日 규제 품목 재고 소진 늦추려  
7나노 EUV 라인 생산 줄일수도  
퀄컴 등 국내외 연쇄 피해 우려  
임원 휴가 반납 비상근무 돌입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 라인 전경.

사진제공 삼성전자

최근 정은승 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임원진은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의 7나노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공정 라인인 탓이다.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에 맞서기 위해 선제 도입한 EUV 공정에는 일본산 포토 레지스트(감광액)가 필수적인데, 현재 재고가 빠듯하다. 삼성전자의 포토 레지스트 재고량은 보통에서 한 달 수준인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포토 레지스트 수입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경우, 엔비디아와 퀄컴 등 대형 고객사를 줄줄이 유치해놓고 공장을 가동하지 못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내 및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V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포토 레지스트의 공급이 불확실한 만큼 삼성전자가 EUV 라인 생산량 조절을 통해 재고 소진 속도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 지난 4월 제품 출하 및 양산을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퀄컴, 엔비디아 등 굵직한 글로벌 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의해 사업 확대가 난항에 부딪혔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및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포토 레지스트 수급 우려로 파운드리 사업 확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연구소에 따르면 EUV용 포토 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수급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포토 레지스트 생산 기업 중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JSR는 벨기에에 생산라인이 있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이 같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규제가 강화되면 일본 기업의 해외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삼성전자의 고객사 확대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수출 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생

산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7나노 EUV 양산이 멈추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요 팹리스 고객의 큰 피해로 이어진다.

삼성전자 파운드리향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 협력사 역시 피해를 입게 된다. 외주 비중이 높은 반도체 테스트와 패키징 등 후공정 업체가 대표적이다. 또 웨이퍼를 비롯해 슬러리(연마소재), 프리커서(증착소재) 등 반도체 공정소재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중소협력사가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탄력반던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램 미세화 공정에도 EUV 기술을 도입할 계획인데, 포토 레지스트 수급 우려로 차세대 D램 양산이 연기되고 후발주자와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록 기자 syr@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포스코, 5억 달러 규모 ESG 채권 발행

철강사 최초...싱가포르 상장  
최정우 회장 "배터리 소재 등  
에너지·환경 분야 투자 강화"

포스코가 전 세계 철강회사 가운데 최초로 지속가능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8일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ESG 채권은 환경 친화,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포스코는 친환경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그린본드(Green Bond)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소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소셜본드(Social Bond)를 결합한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을 발행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는 ESG 채권발행을 통해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새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 신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활동 등 그룹 신성장, 친환경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번 채권발행을 위해 4월 국제지분시장협회의 그린본드 및 소셜본드 기준에 맞춰 'ESG 채권발행 목적과 사용, 사용의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 금융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세계적인 인증 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로부터 글로벌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받았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최근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와 미·중 무역분쟁, 미국 채 금리의 변동성 고조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음에도 포스코의 우수한 영업 실적, 우량한 신용도(무디스 Baa1 안정적, S&P BBB 긍정적) 및 국제적인 인지도를 신뢰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행금리는 5년 미국 국제금리에 105 bps(1bps=0.01%포인트)를 가산한 2.874%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채권은 싱가포르 거래소(SGX)에 상장될 예정이다.

김기송 기자 kissong@

## 현대제철 미세먼지 배출 대폭 줄였다

당진제철소 저감장치 본격 가동  
충남도 기준치 40% 수준 예상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내 소결 공장의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SGTS(Sinter Gas Treatment System·소결로 배가스 처리장치)를 본격 가동시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였다.

9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 5월 1소결 SGTS 가동에 이어 지난달 2소결 SGTS 가동 정상 가동됐다.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1일 배출량은 140~160ppm 수준에서 30~40ppm 수준으로 줄었다.

소결 공장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을 배출하는 곳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신규 설비의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20년 배출허용기준(충남도 조례 기준) 대비 4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측은 내년 6월 3소결 SGTS까지 완공돼 3기 SGTS가 모두 정상 가동되는 2021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

년 기준 2만3292톤에서 절반 이하인 1만톤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소결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7년 약 4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으며 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시작해 올해 5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가동되고 있는 SGTS는 촉매를 활용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 중탄산나트륨을 투입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다. 현대제철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촉매 층을 다단으로 구성해 설비의 성능을 더욱 향상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근 각종 환경문제에 회사가 거론되면서 지역주민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에가동을 시작한 소결 배가스 신규 설비를 비롯해 향후 환경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델타항공 "사업관계 강화"  
한진칼 투자 목적 답변

강성부 펀드(이하 KCGI)는 델타항공이 한진칼 투자 목적을 묻는 KCGI 질의에 '사업관계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9일 밝혔다.

KCGI에 따르면 델타항공의 피터 카터 법무팀장은 답변서를 통해 "한진칼에 대한 투자는 델타항공이 자주 언급하는 투자전략에 따른 것으로, 사업상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KCGI는 델타항공에 보낸 질의서에서 한진칼 경영진과 지배구조 이슈를 합의한 뒤 투자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 지배구조나 이사회 의석 등과 관련해 한진칼 경영진과 미리 합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이번 투자에 대해 한진칼 또는 그 경영진, 주주들과 기업지배구조 혹은 장래 이사회 의석을 포함한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들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한진칼의 기업지배에 대한 관행 또는 이에 대한 그레이스홀딩스의 제안 중 어느 편에도 서 있지 않다"고 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 LGD "올레드 양산 우려 크지 않아"

강인병 부사장 "日 규제 에칭가스 사용량 적어"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양산과 관련해 걱정할만큼(우려가) 크지 않다."

강인병 LG디스플레이 CTO(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은 9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최한 산업미래전략포럼에서 일본 소재 수출 규제에 올레드 양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규제 대상이 된 소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등 3개이다.

강 부사장은 "광저우 공장의 8.5세대 올레드 양산시기도 예상대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지적에 대해 강 부사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른 두 소재와 비교했을 때) 에칭가스에



9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주최 산업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한 강인병 LG디스플레이 CTO(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 한영대 기자 yeongdai@

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이 규제한 소재 품목 3가지 중 디스플레이는 에칭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반도체만큼 사용량이 많지 않다"며 "국산화는 물론 중국과 대만 등 대체재를 찾아 활용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 규제 대응차원에서 올레드 패널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걸 아직 언급하긴 이르다. 상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SKC '플라스틱 쓰레기제거연합' 가입

바스프 등 참여...4번째

SKC가 바스프, 다우케미칼, P&G, 펄시코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플라스틱 쓰레기제거연합 AEPW(Alliance to End Plastic Waste)'에 국내 기업 최초로 가입했다. SKC는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AEPW 이사회를 통해 연합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기업 중에선 SKC가 네 번째 가입이다.

올해 1월 출범한 AEPW에는 플라스틱 제조, 사용, 판매, 가공, 수집 및 재활용 관련 글로벌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인프라를 개발하고 재활용 기술을 발전시킨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고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SKC는 2009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생



왼기둥(오른쪽) SKC 사업운영총괄, 양호진(왼쪽) 화학사업개발부장이 데이비드 테일러 AEPW 의장(P&G CEO)과 AEPW 가입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C

분해 필름을 상용화했고, 이후 태양광 발전 패널 성능을 높이는 필름소재를 개발·공급하는 등 친환경 소재 개발에 앞장섰다. 변호선 기자 hsbun@

# 커피 주문보다 쉬운 투자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 KODEX TRF 시리즈

TRF : Target Risk Fund

주식에 투자하되  
변동성 관리를 원한다면

**KODEX TRF 7030**

주식 반 채권 반 투자해  
투자밸런스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KODEX TRF 5050**

안정적으로  
금리 + 알파 수익을 추구한다면

**KODEX TRF 3070**



### 세상 쉬운 KODEX TRF

#### KODEX TRF [Target Risk Fund] 란?

-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KODEX의 새로운 ETF입니다.

**Q .** KODEX TRF에 어떻게 투자하나요?

**A .** 가까운 증권사나 신한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2697호 (2019.07.05)

KODEX ETF는 주식거래와 똑같이 모든 증권사에서 직접 거래 가능하며, 증권사 랩(WRAP)이나 은행 신탁상품을 통해 간접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KODEX 거래방법 및 상품문의 ☎ 080-377-4777, www.KODEX.com

이기는 투자  
삼성자산운용



# 신차 개발 5년→3년 단축...플랫폼 넘어 아키텍처 중심으로

## 현대차 연구개발 조직 개편 개발비 절감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비어만 사장 "패러다임 변화 대응"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구개발본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플랫폼 개념을 넘어 미래차까지 염두에 둔 '아키텍처 시스템'을 도입, 급변하는 차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신차 개발기간 단축은 물론, 연구개발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9일 현대차그룹은 작년부터 준비해온 '아키텍처 기반 시스템 조직'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본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세부적으로 나뉜 조직은 크게 3가지로 구분 짓는다.

먼저 신차 개발의 밑그림이 되는 아키텍처 개발을 주도하는 △제품통합개발담당, 개별 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부문, 이 두 조직이 만들어놓은 기술을 바탕으로 △PM담당 등이다. PM조직은 소형부터 대형까지 등급별 신차개발을 마무리한다.



제품통합개발담당이 주도하는 아키텍처는 플랫폼보다 상위 개념이다. 연구조직은 이번 개편으로 아키텍처(기본 구조) 속에 기술(시스템)을 채워넣고 차별성(차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대차그룹은 연구조직 개편으로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구성이 갖춰진 만큼 신차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개발비용도 줄일 수 있다. 개발 기간이 단축되면 시장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대차는 2000년대 들어 준중형차(아반떼)와 중형차(쏘나타)를 5년마다 폴모델 체인지로 바꾼다. 일본 경쟁 메이커가 7년마다 새 모델을 내놓을 때 발빠르게 신차를 내놓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차종의 현재 제품고환주기(라이프 사이클) 5년을 향후 3년 안팎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대적인 연구개발본부 조직개편은 2000년대 들어 네 번째다. 앞서 기아산업 인수 이후인 2003년 R&D 통합역량 향상을 위해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현대차와 기아차의 연구개발 기능을 모아 통합 조직을 출범했다. 이 조직은

2005년까지 통합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이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아키텍처 이전 단계인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개발비용 절감과 다차종 개발에 나섰다. 이 무렵 연구개발 조직도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과 미국 나아가 중국까지 거점별 연구소를 세웠다. 현지화 모델 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세 번째 변화의 시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다. 분야별 기술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기능 전문화 조직을 강화해왔다.

네 번째 변화인 아키텍처 시스템 도입은 향후 다가올 미래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미래차 기술 리더십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이번 R&D 조직 구조 개편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고객 요구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 환경과 협업 방식의 변화를 통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Premium Toothpaste**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9無 루바스천연치약** (주)루바스 바이오 제약 **LUBAS**

- 유해 성분 9無
-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 치태 케어
- 잇몸질환 예방 약한잇몸 케어
-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 건강치약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 국민청원 간 'LG 건조기 냄새 논란' 해당 제품 부품 10년 무상보증

**"요청 시 방문 점검 서비스"**

LG전자가 최근 불거진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콘덴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당 부품에 대해 10년 무상보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LG전자는 9일 입장문을 통해 "LG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열 응축기라고 불리는 콘덴서는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뜨거운 바람이 머금은 습기를 냉각시켜 수분은 배출하고 공기는 다시 건조에 이용하는 장치다.

LG 의류건조기의 경우 2개의 먼지 필터를 거쳐 먼지를 제거한 후 겹겹이 쌓인 얇고 차가운 콘덴서를 지나는 구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2개의 먼지 필터에서 걸리지 않는 먼지가 콘덴서에 들러붙고, 콘덴서를 씻어 내는 응축수에 먼지가 섞여 악취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소비자들이 모인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 가입자는 무려 2만 명에 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LG 의류건조기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품의 리콜 및 보상을 요청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LG전자는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콘덴서 10년 무상보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의 1년 무상보증에서 기간을 대폭 늘린 것이다.

LG전자는 "콘덴서에 일정 수준의 먼지가 있더라도 의류건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고객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기간 내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의 경우, 서비스 엔지니어가 방문해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현대중 '힘센엔진' 비상발전기 인도 원전 진출

진도 8 강진에도 전력 안정 공급 유럽社 제치고 570억 단독 수주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힘센엔진' 인도 원자력발전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중합상사와 함께 인도 민영발전회사인 파워리카(Powerica)와 4900만 달러(한화 약 570억 원) 규모의 '비상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비상 발전기는 6.3MW급 중형엔진인 힘센엔진 10기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까지 인도 남부의 타밀 나두주 쿠단쿨람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현대중공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원전 비상 발전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유럽 엔지니어들을 제치고 단독 수주에 성공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원전 비상 발전기는 원자력발전소가 긴급한 상황으로 운전을 멈췄을 때 순환수펌프 등에 전력을 공급해 원자로의 안정적 유지를 돕는 설비다. 멜트다운 등의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5초 이내에 비상 전력을 공급해야 해서 높은 안정성과 품질이 요구된다. 현대중공업 비상 발전기는 진도 8 이상의 강진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맞춰 노화, 방사능, 전자기파 공인시험을 모두 통과하는 등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품질을 갖추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세계 3대 원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정착시켜 고객신뢰 높이겠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9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밝혀

가격표시제, 올해 100곳 도입... 2021년까지 500곳으로 확대  
소상공인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육성 등 온라인 진출 지원 속도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돕는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올해 전통시장 100곳에서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키고 2021년까지 전국 500개 전통시장으로 확대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속에서 전통시장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격표시제 정착이다. 조 이사장은 가격표시제를 강조하는 이유로 가격표시제가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시장에 가보면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진열해 놓은 물품중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이뤄져야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 지원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을 내놨다.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소상공인 400명을 1인 방송 크리에이터 및 마케터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1000명 이상의 1인 크리에이터를 육성해 연간 3000건 이상의 상품 홍보를 한다는 목표다. 종합·전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과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입점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SNS에서 일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영업장들이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 충분히 콘텐츠

츠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분위기여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시장내 ‘리딩점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상인을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청년상인 도약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테마형 청년몰을 육성하거나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청년상인을 시장혁신의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얘기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확한 지원을 위해 데이터 집계 및 분석작업에도 착수한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해도 관련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 및 연구하는 부서를 강화하고 예산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정책들이 정확히 구상이 되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동·이업종 소상공인의 협업을 끌어내는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 발굴·육성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까지 조합원·매출·고용인원이 10% 이상 증가한 협동조합을 150개

이상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소상공인은 올해 폐업 후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 6000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총 2000건의 철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힐링캠프’의 운영도 확대한다. 올해 목표치는 500명으로 정했다. 또 비과밀업종 전환 소상공인에게는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조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인회 상인들”이라며 “상인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노력이 있어야 매출도 잘 오르는 활기찬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시장은 고객신뢰가 제일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객최우선, 위생정결, 가격표시제 등이 당연히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김 모씨(여, 만 83세)는 새벽 3시에 두통 및 혈압 이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SOS를 호출했다. 집안에 있던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AI 스피커 ‘누구’는 이를 위급 신호로 인식, 야간 관제를 맡고 있는 ADT캡스에 알람을 알렸다. 어르신은 이후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 독거 어르신 친구 ‘AI 누구’ 위급상황 발생땐 119 신고

SK텔레콤이 ICT 인프라를 활용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행복한 예코폰이 지난 4월 1일~5월 31일까지 두 달간 독거 어르신들이 AI스피커 ‘누구’를 통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사용한 패턴을 분석,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행복한 예코폰,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 AI스피커를 두배 정도 많이 사용했다. 독거 어르신들은 감성 대화의 비중이 일반 이용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감성대화 이용횟수 뿐만 아니라 키워드 분석에서도 어르신들이 AI스피커를 친구와 같은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공지능돌봄 서비스는 독거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음성으로 SOS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위기대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AI스피커는 독거 어르신들이 “아리아! 살려줘!” “아리아! 긴급 SOS” 등을 외칠 경우 이를 위급상황으로 인지하

**SKT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두달간 3명 위험한 순간 넘겨  
‘감성대화’ 사용 비중 13.5%  
일반인 사용패턴의 3배 이상**

고, ICT케어센터와 담당 케어 매니저, ADT캡스(야간)에 자동으로 알려준다. 이후 ICT케어센터에서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119에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SK텔레콤과 행복한 예코폰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AI 스피커에 적용되는 신규 서비스인 ‘행복소식’은 행정구청 관내 이벤트를 안내하고, 복약지도 및 폭염·한파 주의 안내 등에 사용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훈련 향상 게임을 보라매병원과 함께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위급 상황 발생시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용 행태도 확인됐다. AI스피커가 설치돼 있는 독거 어르신 중 3명은 긴급 SOS 호출을 이용, 실제로 119·응급실과 연계해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

김범근 기자 nova@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해찬 만난 中 小 “현안 해결 힘써달라”

최저임금·개성공단 문제 등  
중기 현장 과제 45건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개성공단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개성공단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당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막바지 협상 중인데 중소기업계도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협상이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오해를 없애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 가겠다는 기업이 2000여 개가 있다”며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면 미국, 유럽 기업들이 들어와 국제 공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에 더해 일본의 수출 규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하루빨리 정치, 외교 문제가 해결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



김기문(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중기중앙회 회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이전 중소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급이 가능한 한 적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에 놓고 있다”며 “어제는 ‘2차 중소기업정책 심의회’가 열렸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대부분이 중소기업 정책”이라며 “오늘 일제가 건의한 현안 과제 45건을 꼼꼼히 살피고 당정 협의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협

동조합의 공동 행위 허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세계 개편 지원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 소득세 과세 적용 △개성공단 재가동 및 국제공단화 등 중소기업 현장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결정구조 개선과 △결정주기 확대 건의가 있었다. 김민식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최소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쿠쿠, NCSI조사 전기밥솥 부문 1위

6년 연속 1위... 밥솥명가 입증

쿠쿠전자가 2분기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기밥솥 부문 1위에 선정돼 6년 연속 1위 자리를 전기밥솥 명가의 면모를 입증했다.

‘국가고객만족도 (NCSI: National CustomerSatisfaction Index)’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 품질 평가 조사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를 나타낸 지표로 1위브랜드를 선정한다.

쿠쿠는 “전기밥솥 시장의 대명사로 고객의 인식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후발 주자의 등장에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다”며 “다양한 카테고리로의 확장해 종합 생활가전 브랜드로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쿠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프리미엄 밥솥을 기반으로 한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쿠쿠는 집밥 문화가 확산되며, 밥솥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멀티쿠커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프리미엄 밥솥으로 소비자들의 큰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쿠쿠전자의 혁신 기술과 섬세한 서비스를 꾸준히 유지, 발전 시켜 프리미엄 밥솥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실질 최저임금 시대 편의점 출점 속도 '급제동'

상반기 순증률 일제 하락세  
시급 인상에 인건비 부담  
직원 줄이고 근무강도 세져  
예비 창업자들 관심 멀어져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은 지 6개월이 지났다. 예상대로 올들어 6개월동안 편의점의 출점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전년 대비 점포수 증가가 크게 둔화된 편의점 업계는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점포 순증(개점 매장에서 폐점 매장을 뺀 수치) 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작년 상반기 394개가 증가했던 CU(씨유)는 올해 360개 늘리는데 그쳤고, GS25 역시 343개에서 263개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점포가 각각 8.6%, 23.3% 줄어든 셈이다.

그나마 선방한 상위 2개 업체를 제외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상반기 270개 점포가 늘었지만 올해는 182개로 증가폭이 32.5% 축소됐고, 후발주자로 가장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펴온 이마트24 역시 올 상반기 371개 확장에 그쳤다. 이는 작년 상반기 584개에 비해 36.5% 감소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편의점 순증 점포 수 감소의 주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는다. 2015년 5580원이던 최저 시급은 2016년 6030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7530원에서 올해는 8350원으로 상승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인건비 부담에 편의점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거나 '알바 쪼개기'를 통해 근무 시간을 줄이다 보니 점주들의 근무 강도는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편의점 창업에 뛰어드는 이들은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 초 도입된 자율규약 역시 신규 출점을 제약하고 있다. 자율규약은 담배 판매거리 제한에 따라 50~100m 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한다. 과밀화를 해소해 점주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편의점 순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건비라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대 인력 의존도가 높다. 편의점 점포 당 수익에서 인건비 비중은 대략 30% 내외 수준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자율 규약이 시행됐지만 지방 소도시나 대학교 등 출점할 곳은 많다. 문제는 인건비"라면서 "점포별로 다르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는 대신 점주 근무 시간은 늘어나는데 수익은 월 60~80만 원씩 감소하면서 편의점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트24의 경우 올해 상반기 592개 점포가 개점했고, 161개가 폐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1개 개점, 107개 폐점에 비해 신규 출점은 23% 줄었지만, 문을 닫는 점포는 50% 늘었다. 개점에 비해 폐점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점포를 정리하는 점주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의 관심은 15일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쏠려있다. 인상 폭에 따라 점주들의 수익성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곧 편의점 개점 및 폐점 숫자로 직결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 수준인 3% 정도만 오른다면 점주들이 작년 수익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편의점 점포 수는 4.4%, 점포당 매출은 4%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이 3~5% 수준에서 마무리될 경우 점주의 비용 증가로 인한 출점 둔화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 〈롯데그룹〉 日 재계 만난 신동빈 회장 양국 간 '엷힌 실타래' 풀까



재계 인사 면담  
이당장 한일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일본 재계 역시 수출 규제로 인한 어려움

갈등 길어지면 실적악화 우려  
내주 '하반기 사장단 회의'서  
방일 성과 공유할지도 주목

일본을 방문 중인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악화된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에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 사장단 회의를 열릴 가장 앞둔 지난 5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후 노무라증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 회장은 한국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일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수준을 넘어 신 회장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재계에 두터운 인맥을 자랑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며 한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신 회장은 일본을 방문해 재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재계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롯데 계열사와 합작사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일본 브랜드 명단에 유니클로, 무인양품, 롯데아시아주류 등 롯데 합작사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어서다.

롯데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을 직접 취급하는 계열사는 없지만 국내에서 일어난 수출규제 대응 중 하나인 불매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 한일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롯데합작사들의 실적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 회장이 일본 금융권 및 재계 인사들을 만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수출 규제가 정치적 이슈인 만큼 신 회장의

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이해관계가 정치권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재계가 신 회장의 행보에 실낱같은 기대를 거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일 중 신 회장과 아베 총리와 의 만남이 성사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부터 이어져온 아베 총리와 신 회장간의 인연은 4년 전 도쿄에서 열린 신 회장의 장남 결혼식 피로연에 아베 총리가 하객으로 참석했을 정도로 각별하다.

롯데그룹은 16일부터 5일간 신 회장 주재로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연다.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장단 회의는 롯데그룹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5일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예년에 비해 긴 시간동안 개최하기로 하면서 신 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던질 화두에 롯데 계열사를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의에서 신 회장은 이번 방일 과정에서의 성과 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롯데는 신 회장의 향후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회장이 이번 방일에서 민간 외교 사절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또 사장단 회의에서 계열사 사장들에게 어떤 주문을 내놓을지에 한일 양국 재계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에저 르쿨트르' 최고급 명품 시계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 2층에 있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에저 르쿨트르' 매장서 총 15억 원 상당의 하이엔드 시계(3점)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에저 르쿨트르' 매장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시계의 정확성을 위해 중력의 영향을 상쇄해주는 투르비옹이 장착된 제품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8월까지 선보인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JTI, 신제품 출시 앞두고 최다 유통망 확보했지만...

전자담배 '플룸테크' 편의점 4사 출시... 日브랜드 불매 확산에 부담

JTI코리아(재팬타바코인터내셔널코리아)의 가열식 캡슐형 전자담배 '플룸테크'(Ploom Tech)가 15일부터 서울 지역 편의점 4개사에서 동시 판매를 시작한다. 이로써 플룸테크는 편의점 4개사 동시 출시로 기존 권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가운데 초기에 가장 많은 유통망을 확보했다.

종전의 권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는 출시 초기 1개 편의점 브랜드에서 단독 론칭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관계자는 "플룸테크가 전자담배 후발주자인 만큼 유통망 확보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룸테크'는 담배잎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던 '플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30도의 저온으로 가열된 저온 증기를 담뱃잎이 들어있는 캡슐을 투과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권련형 전자담배의 단점인 찻맛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JTI코리아 측은 이를 의식한듯 11일로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JTI코리아 측은 "실내 흡연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외 행사로 준비했지만 당일 비가 예보돼 부득이하게 미루게 됐다"며 "JTI는 본사가 스위스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신제품 국내 출시 시점부터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채식주의자 모여라" 헬로네이처 '비건존' 오픈

온라인 푸드마켓 헬로네이처가 까다로운 비건 장보기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비건 전문 존(#VEGAN)을 새롭게 오픈했다.

9일 헬로네이처에 따르면 이번에 오픈한 비건존은 국내 비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간편한 비건 장보기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다양한 상품군과 새벽배송 서비스를 기반으로 쉽고 빠른 비건 장보기 환경을 제시한다. 먹거리 다양성 추구의 일환이다.

비건존 오픈을 결정한 데는 비건 특유의 자연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도 한 몫 했다. 특히 최근 친환경이나 동물보호 등 개인적 신념을 지키려는 비건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건존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고자 하는 헬로네이처의 노력이 담겨있다.

비건존에는 신선식품과 간편식, 베이커리, 스낵/아이스크림, 시리얼, 조미/양념/오일, 음료, 대체식품, 생활용품의 9가지 카테고리에 약 200개의 상품이 비건존 오픈과 동시에 라인업을 마쳤다.

비건존에서는 비건들의 주식인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새벽배송을 통해 보다 신선하고 빠르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비건 쇼핑물들과 차별성



이 있다. 비건존 내에는 고객 목소리를 듣는 장구를 마련, 신제품 출시와 카테고리 구성에 실제 비건들과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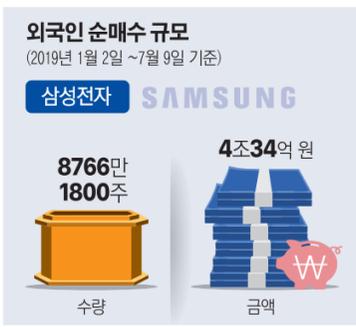
이를 통해 헬로네이처는 비건존을 정통 비건은 물론 건강한 식생활을 원하는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비건 종합 쇼핑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환 헬로네이처 상품기획팀장은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주의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상품의 도입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을 해왔다"며, "이번 헬로네이처 비건존 오픈이 비건 장보기의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삼성전자 外人 지분율 57.39% '역대 최고'

반도체 업황 하반기 회복 기대  
올들어 4조34억여치 순매수  
日 수출규제 시장 예측 불가능  
外人 이탈땀 주가 악영향 우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견고한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7.39%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 5월 7일 기록한 57.33%다. 2001년 3월 말 57.30%를 약 18년 1개월 만에 넘어선 뒤에도 꾸준히 지분율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은 연초부터 꾸준히 삼성전자 매수세를 이어오며 올들어서만 총 4조34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특히 지난 이틀간 코스피지수가 60포인트 이상 빠지는 상황에서도 1005억 원 가량 순매수했다.

상반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연일 사들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매출액 56조 원, 영업이익의 6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2%, 영업이익은 56.2% 감소한 수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매출 108조3900억 원, 영업이익 12조73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58%나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 이유를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설명한다.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회복세에 접어들면 삼성전자의 실적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지만 사업별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실적개선이 전망된다"며 "특히 디램은 아직은 가격하락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용량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하반기 시장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지 여부는 지켜볼 대목이다.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이탈할 경우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이순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전자 소재 관련 수출 규제가 변수로

부상했다"며 "당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전이 될 경우 향후 예측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IT 수요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을 기대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외부변수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역시 최근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반도체 밸류체인 최저가 매수전략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한국거래소 이사장>

## 정지원 "유가증권시장 퇴출제도 개선 추진"

현행 퇴출기준 10년 전 마련... 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  
부실징후 기업 신속 퇴출 등 실질심사 검토 대상 확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퇴출제도 개선에 이어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투자지원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정지원(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매출액·시가총액 퇴출기준이 마련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기준이 기업규모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 검토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10년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심사제도 및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거래소도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본시장의 ESG 환경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 ESG채권의 정의, 기준 및 표준화된 발행절차 등을 포괄하는 인증기준 도입하고 EGS 채권 전용색션도 마련할 계획이다. ESG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G)의 품질 개선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서비스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장기간 큰 틀의 변화 없



이 운영해오던 호가 가격 단위와 대량매매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형 액티브 ETF와 국내 상장리츠 기반의 새로운 리츠 ETF 등 새로운 유형의 ETF 도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일정에 발맞춰 BDC 상장 및 상장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증시의 일본계 자금 잔고는 12조~13조원 가량으로 전체 외국인 자금의 2% 정도"라며 "일본계 자금의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허승범 삼일제약 부회장, 잇단 지분 매입 '3세 경영체제' 확립 박차



지난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오너 3세 허승범(사진) 삼일제약 부회장이 올해도 꾸준히 회사 주식을 매입하며 "허승범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허 부회장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1082주를 장내매수했다. 지분 매입에 든 비용은 2억9875만 원 규모로, 보유 지분은 11.29%에서 11.46%로 올랐다. 허 부회장은 1월 초에도 5002주를 약 1억 원의 비용을 들여 장내매수했다.

허 부회장은 3세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다. 지분 확대 움직임은 2015년부터 본격화됐다. 2015년초 3.05%(16만7729주)에서 같은해 말 4.01%(22만278주)로 1%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에는 5차례나 자사주를 매입했

으며, 2017년에는 아버지인 허강 회장으로 부터 주식 35만2941주를 증여받아 지분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지난해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 허 회장에서 허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현재 허 회장의 지분율은 9.95%다.

본격적인 3세 경영의 닳을 올린 허 부회장은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꾸준히 지분 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허 부회장은 매년 꾸준히 3세 경영을 위한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회장 자리에 오른 지난해 삼일제약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57억 원, 86억 원 규모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고, 순손실규모는 확대됐다.

허 부회장은 올해 투자확대와 주요제품 위주의 영업 강화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www.douzone.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재무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급서비스, 금융CMS서비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림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림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영화 '쥬라기월드' 특별전 참여·캐릭터 사업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음향산업에 콘텐츠 연계, 新시장 개척 박차

## 기업탐방

### 삼본전자



삼본전자 본사 전경. 사진제공 삼본전자

이어폰과 헤드폰 등 음향전문 ODM (제조업자개발생산) 전문업체 삼본전자가 음향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결합한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된 삼본전자는 2010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설립 당시부터 JVCKENWOOD와 파트너십을 맺고 OD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사업 초창기 일부 실수도 있었지만 자체 반쯤터리를 통해 재생산 납품하고 생산라인을 재정비하는 등 신뢰를 쌓고자 노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1995년 6월

JVC로부터 품질자주공장으로 지정돼 공장 자체 품질기준의 충족 시 별도 검수를 거치지 않고 최종 소비자까지 자체의 품질기준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JVC와 삼본전자의 관계는 현재까지 중대한 품질사고 없이 유지되고 있다. 삼본은 JVC의 벤더 중 사업총액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또

다른 거래처인 Audio-Technica의 벤더 중 납품 점유율은 6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디오 주변기기 관련 시장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실적이 내리막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삼본전자는 음향 전문에 국한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필룩스가 대표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의 기술과 필룩스의 역량을 연계해 중장기적으로는 응용제품 개발 및 신규 유통채널의 확대 등 사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본전자는 또 ODM에 치우쳐 일반 소비자층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지도 제고에 나섰다. NBC유니버설사의 쥬라기월드 영화를 활용한 '쥬라기월드' 특별전 참여가 그 일환

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했다"며 "특별전 기간 체험형 부스를 통해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음향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결합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본전자는 음성인식과 AI(인공지능)를 연계한 스마트 홈기기의 등장, 웨어러블 스피커 시장 확대 등 음향시장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는 아니지만 SK텔레콤, 컴캐스트, 하이랜드캐피탈과 헤드셋, e-스포츠, IP(지식재산권)를 통한 머천다잉, 캐릭터 사업 등 음향과 콘텐츠의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으로의 진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이수앱지스, 경북대 손잡고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추진

이수앱지스는 경북대 신학협력단과 'ASM 억제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의 기술이전과 이에 기반한 새로운 알츠하이머 타겟 ASM 항체 신약 개발의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이수앱지스는 경북대학교의 ASM(Acid sphingomyelinase) 억제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 물질에 관한 기술 특허 실시권을 받았다.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 항체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신약 후보물질 선정을 위한 스크리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배재성·진희경 경북대 교수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혈액에서 세포 활성을 조절하는 스피נג지질(sphingolipid) 대사 효소 중 하나인 ASM의 활성이 정상인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 실험을 통해 ASM 효소를 억제했을 때 뇌혈관 내 아밀로이드 베타(Amyloid-beta)의 축적이 저해되고 학습 및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티레이더. 유안타.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선생님 투자하는 방법? 십다만은 안된다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출금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일 제9-62호(2019.02.28)

## 엠케이전자, 스마트폰용 필수 반도체 부품 양산 '솔더 페이스트' 국산화 성공

엠케이전자가 스마트폰용 반도체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 양산에 들어간다. 솔더페이스트는 프린트 배선기판의 납땜에 사용되는 크림의 일종이며, 필수적인 소재 중 하나로 꼽힌다.

엠케이전자 관계자는 9일 "이번 제품의 최종 고객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라며 "초기 개발부터 최종 승인까지 2년간의 투자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이 앞선 미국, 일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분야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이번 제품을 필두로 반도체 분야의 고객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엠케이전자는 현재 2~3개 고객과 올해 내 승인을 목표로 스마트폰용 제품을 추가로 평가 중이다. 향후 3년 이내에 국내 반도체 분야 하이엔드 솔더페이스트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이 목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는 반도체 시장을 타겟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전장, 가전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엠케이전자는 올해 1분기 중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될 반도체 실장용 하이엔드 솔더페이스트 개발과 고객



승인을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해왔다. 양산은 6월부터 시작해 국내 반도체 패키지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솔더페이스트는 반도체 칩 등 전자 부품과 회로기판을 이어주는 접합 재료로 솔더파우더(powder)와 플럭스(flux)를 섞어 만든다. 이번 반도체용 제품에 적용되는 솔더파우더는 15마이크로미터(μm) 이하 초미세 파우더를 사용한다. 플럭스는 송진과 같은 바인더(binder)를 말하며 입자를 묶는 역할을 한다. 솔더페이스트는 그동안 기술력이 앞선 미국, 일본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 왔다. 2018년도 기준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 국내 시장은 2000억 원에 달한다. 고희민 기자 kjm@

오전 10시에 제공하는 투자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Money 10에 게재됐습니다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7월 9일 1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98,100	10,700 (2.2%▲)	모네로	119,300	-3,400 (2.8%▼)
리플	472	1 (0.2%▲)	비트코인골드	31,760	1,750 (5.8%▲)
라이트코인	142,500	-600 (0.4%▼)	이더리움 클래식	9,490	25 (0.3%▲)
대시	199,000	900 (0.5%▲)	퀀텀	5,795	30 (0.5%▲)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상반기 건설사 실적 '희비' ...



## '울고'



## '웃고'

삼성물산 지난해보다 39.6% ↓  
대우·GS건설도 30% 이상 하락  
HDC현대산업개발 177% 급등  
주택·해외수주 부진에 양극화

건설업계가 실적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해외 건설 수주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상장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대부분 전년 대비 줄며 업황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9일 이투데이가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의뢰해 시공능력평가(시평)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 중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내놓은 상장 건설사들의 올해 상반기 예상실적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등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시평 순위 1위인 삼성물산의 경우 가장 큰 폭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데, 올해 상반기 예상 영업이익은 3545억 원으로 전년(5873억 원) 대비 39.6%의 실적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건설부문만 따로 예상치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KTB투자증권이 추산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올해 2분기 실적 하락치만도 전년 대비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그룹 공사의 조기 인식으로 급증했던 것에 대한 역기저와 함께 홍콩지하철 등 공기가 지연된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2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4%의 급락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두드러진 주택부문 매출 감소가 상반기에도 이어졌고, 플랜트부문도 수주 부진으로 감소 추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의 실적 하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4185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 올해 상반기 대형 건설사 실적 (단위: 억 원, %, 영업이익 기준, 2019년은 추정치)

	지난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 상반기 (상반기기준)
HDC현대산업개발	997	2762	177.1
현대건설	4394	4477	1.9
대림산업	4732	4502	-4.9
GS건설	6091	4185	-31.3
대우건설	3437	2254	-34.4
삼성물산	5873	3545	-39.6

※출처: 에프엔가이드

기(6091억 원)에 비해 31.3% 하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GS건설은 당초 상반기 1만 가구 정도의 분양을 예상했지만 절반을 조금 넘긴 6500여 가구를 분양하는 데 그쳤다. 대림산업도 전년 동기보다 4.9% 감소한 450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이후부터 신규 수주가 줄면서 이익이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반면 범현대가 건설사들은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점쳐지면서 하

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447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의 성장세다. 올 하반기에 추가 수주만 할 수 있다면 또다시 연간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도 가능한 성적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경우 플랜트 및 토목부문 원가율 개선 등으로 실적 역시 순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의 2762억 원이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7.1% 급등한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매출액 역시 2조1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처럼 국내 건설사들의 실적이 양극화 흐름을 보인 것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진 데다 해외 수주 실적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실적 역시 주택 및 해외 수주에 따라 크게 갈릴 전망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휴가철 비수기 앞두고... 7월 분양경기 위축 전망

7월 분양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8.6포인트 하락한 68.7로 집계됐다. 3개월 만에 다시 60선으로 하락한 것이다. 수도권 전망치는 다소 개선됐으나 기타 지방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40~70선에 마른 영향을 컸다.

이달 HSSI 전망치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월 대비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3.6)·세종(95.4)·대구(93.5)·대전(83.3)·광주(80.0)가 80~90선, 기타 지방은 40~70선을 기록했다.

주산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지만 서울과 세종·대전·대구·광주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양 열기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화성 SK뷰파크 '클린에어 스테이션'

SK건설은 경기 화성시 기산동 'SK뷰파크 3차'에 '클린에어 스테이션'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클린에어 스테이션은 단지 내 통학버스 대기공간에 공기청정시스템을 적용한 시설로, SK건설이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SK건설의 클린에어 스테이션에는 H13급 고성능 헤파필터를 적용한 공기정정기와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어 어린이와 보호자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언제부터?

이달 개정안 발의되면 9월 시행  
충격 완화 위해 유예기간 가능성  
후분양 단지까지 대상 넓힐 수도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주택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9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대상 단지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출범 이후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써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막판까지 손대지 않았던 카드일 만큼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책이어서 정부도 그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

하지만 장관의 발언이 나온 만큼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

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돼 시행령 개정은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할 때 9월 중에는 공포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당시에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줬고, 이 틈을 타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낸 바 있다.

또 막바지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7년 8·2 대책이나 지난해 9·13 대책처럼 8·9월에 개선책을 내놓을 경우

엔 10월이나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 전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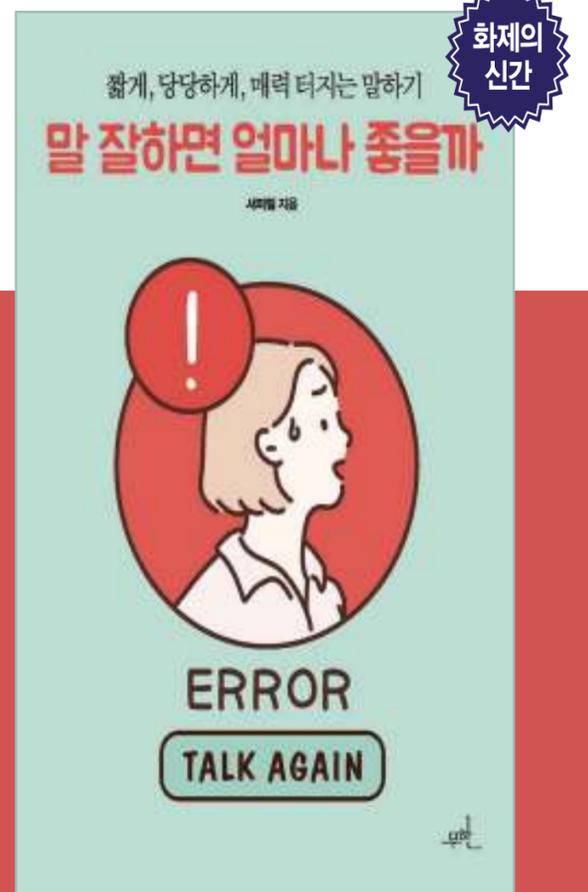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변경 여부도 관심사다.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적용 범위 역시 후분양 단지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적용대상(정비사업장 기준)을 '제도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서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소급 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훑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 ‘불법파견’ 박한우 기아차 사장 기소

### 860명 車 생산업무에 파견 수사 4년 만에 사건 마무리 정몽구 회장은 기소 제외



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업무는 자동차 생산과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볼 여지가 많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사내 협력사 계약, 관리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서야 고용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올 초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은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분회 노조원 46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회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원은 근로자들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7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하면서,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간접 공정에 투입된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13곳 중 8곳 지정 취소

### 기준점 넘지 못했다며 취소 결정 “각본에 짜맞춘 평가” 강력 반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무더기로 탈락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자사고 13곳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송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교가 기준점(70점)을 넘지 못했다며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달 22일부터 사흘간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이뤄지면 이들 8개교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되며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배정받는다. 단, 현재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을 받는다.

이번에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 중 한 대부고를 제외한 7개교는 5년 전 평가 때도 기준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바 있다. 당시 이들 학교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를 직권취소하거나 유예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교육청은 구체적 평가지표별 점수나 총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평가 대상 학교들의 점수는 대부분 60~70점대였고, 최고점은 80점대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해당 자사고들은 학교장, 학부모, 동문 등과 함께 낸 성명을 통해 “각본에 짜맞춘 평가”라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들 자사고는 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치킨집 “생맥주도 배달됩니다”

###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페트병에 담아 음식과 판매 허용

9일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이는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

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읍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했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하기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세계로 가는 사찰음식

### 불교문화사업단, 해외 홍보 박차

“낙원처럼 매혹적인 사찰음식을 맛보게 돼 영광입니다.”

5월 로마에서 진행된 이탈리아 사찰음식 만찬 행사에 성악가 조수미 씨가 참여했다. 예정에 없던 등장이라 만찬 행사 참가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조 씨는 “8년 전부터 채식에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스케줄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찰음식에 워낙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2002년 출범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을 통한 한국불교 전파’를 기치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에는 출범 20년을 맞는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역시 중장기 전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김소희 기자 ksh@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마진거래는 도박” vs “지나친 규제” 논란

##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최근 해외 대형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마진 거래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 마진 거래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죠. 그렇다고 허용한 것도 아니며, 법적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의 마진 거래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진 거래 어디에 쓰이나 = 마진 거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진 거래란 거래소나 증권사에 예치한 증거금을 기반으로 시세를 예측해 증거금의 몇 배수까지 공매수나 공매도하는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배 마진 거래를 서비스하는 거래소가 있다면 사용자는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의 코인을 현물 없이도 매수나 매도할 수 있는 셈이죠.

만약 1000만 원어치를 매도한 후 가격이 내려가면 1000만 원에서 하락한 분이 이익이 됩니다. 하락한 가격으로 사서 1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공매도한 이후 가격이 오르면 필요한 증거금이 증가하는데, 이를 채워 넣지 못하면 증거금을 강제로 청산당하게 되죠.

공매수의 경우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왜 마진 거래를 할까요. 시세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예측한 후 가지고 있는 투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몇 배수 마진 서비스냐에 따라, 10배 건 100배 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니까요.

반면 상승과 하락 예측에 실패하면 증거금을 모두 잃을 위험도 크죠. 레버리지 효과만큼이나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마진 거래는 유동성 공급의 키 = 그런데 마진 거래가 꼭 나쁜 것이라 주장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에 마진 거래가 생긴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된 ‘김치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마진 거래의 주요 장·단점	
<b>장점</b>	<b>단점</b>
국내 거래소가 비싼 '프리미엄'을 해소할 수 있음	많은 이가 위험성이 높은 거래에 노출
<b>법적 해석 공방</b>	<b>서비스 제공 거래소</b>
경찰과 검찰, 금융당국 등 정부기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제도 미비로 처벌 불가
불법 신용공여 제공, 불법 도박장 개설 등 위험	
<b>해외 가상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 현황</b>	
<b>일일 거래량</b> 약 4조9540억 원(35만3862비트코인)	
<b>특징</b> 한국인 사용자도 제약 없이 사용 가능	
※ 코인월스 기준	

거래소 예치금 기반 공매수·공매도 시세 상승·하락 예측 위험 크지만 똑같은 코인 거래소간 가격 다들때 싸게 사 비싸게 파는 차익거래 효과 국내선 아직 명확한 법적 판단 없어 '불법' 결론엔 투자자도 처벌 대상

우리나라에서 코인이 해외보다 비싼 이유는 유동성 차이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싸게 산 코인을 국내로 보낼 때 위험을 피하는 해지(위험관리) 수단으로 마진이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코인이 거래소 간 가격이 다를 때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거래소에서 파는 것이 가능하죠. 이런 거래를 '재정거래(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선 일정량의 현물이 필요하거나, 빌려 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전송 도중 시세가 변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고파는 게 순식간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싼 거래소에 이미 여분의 코인이 예치돼 있어야 가능하겠죠. 다량의 코인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차익거래자들이 모두 그렇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량을 빌려주는 곳이 필요한데 마진이 이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시세로 공매도를 한 만큼 코인을 매수한다면, 코인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수익도 손실도 나지 않게 되죠.

매수한 코인을 재정거래에 쓰고 난 후 공매도한 것과 함께 처분하면, 실재론 코인을 빌려 쓴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국내에선 참여한 공방 중 = 코인 마진거래는 아직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일부 거래소가 마진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사법 기관으로부터 불법 도박장 개설로 수사를 받았습니.

지금은 코인 마진을 불법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거래소와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태이죠.

먼저 경찰과 검찰은 마진거래를 일종의 신용거래로 보고,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조에서는 무인가자의 금융투자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인가받은 금융 사업자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불법이란 것이죠. 이밖에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를 기반으로 불법 투자를 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상화폐와 관련해 아직 법과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만약 마진 거래가 불법으로 결론이 날 경우, 마진 거래를 한 투자자들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죄는 속인주의(장소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모두 해당하는 규제)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장 이모저모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기관 투자가 전용 채권이 출시됐고, 미국 최대 선물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의 출시를 준비중이던 전망이 나왔다.



### 기관 투자 전용 '비트코인 채권' 나왔다

록셈브르크 기반 증권회사 아르젠토(Argento)와 런던블록 익스체인지(LBX)가 비트코인 채권을 출시했다. 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르젠토-LBX는 영국 규제 기관인 금융감독청(FCA)에 규제를 받는 '비트코인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아르젠토-LBX 채권은 블룸버그 터미널(단말기)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증권코드(ISIN)를 갖고 있다.

벤자민 데이비스 아르젠토 최고경영자(CEO)는 아르젠토-LBX 채권을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팔 계획이 없는 장기 투자자에게 훌륭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美 CME그룹, 이더리움 선물 출시하나

미국 최대 선물거래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이 이더리움(ETH) 선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은 "CME그룹이 이더리움 기준 가격과 관련 지수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이더리움 선물 상품 출시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전했다.

CME 그룹은 뉴욕 기반 핀테크 기업 파코스(Paxos)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잇빗(itBit)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지수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현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잇빗 추가는 CME가 이더리움 선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CME는 지수의 견고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ETH 발행량 2021년 10배 감소 전망"

2021년 이더리움(ETH) 연간 공급량이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저스틴 드레이크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은 "2021년 3월 이더리움 2.0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작업증명(PoW) 합의 프로토콜이 폐기되면, 이더리움의 블록당 인센티브가 2ETH에서 스테이킹 정도에 따라 0.22ETH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http://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여말린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378호(2019년1월31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 “순수 국내기술 ‘AI비서 데모’ 연내 선보일 것”

### 지능형 빅데이터 엔진 개발 도전...이지현 시즐 대표

#### 글로벌기업 언어 해독 알고리즘 적중률 낮아 “직접 만들자” 중진공·기보 등서 투자 유치...10여개 기업과 협업 진행 중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첫머리에 인공지능(AI)이 손꼽히고 있다. 제조업과 자동차, IT, 서비스업은 물론 각국 정부에서조차 AI 선점을 두고 치열한 두뇌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가운데 국내 순수 기술로 ‘AI비서’ 지능형 빅데이터 엔진을 개발하는 청년이 있다. 시즐(sizl) 이지현(27·사진) 대표와 박필석(31) 연구개발팀장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AI 빅데이터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사연을 들어봤다.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이 대표는 당초 ‘유통 플랫폼’ 개발에 도전했다가 AI 빅데이터에 심취했다. 유통 플랫폼을 구동하려면 그에 맞는 ‘지능형 검색 엔진’ 등이 필요한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지인의 소개로 박 팀장을 만나게 된다. “시즐의 최초 목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언어 흐름을 파악해주는 ‘언어해독 원천기술 엔진’을 개발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언어 해독 알고리즘은 구글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에서 직접 개발한 API

(요약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함수의 집합체) 형태로 배포되고 있어요. 저희도 당연히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구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막상 도입 시도를 해보니 저희가 원하는 산출값이 나오지 않았고, 적중률도 매우 낮았어요.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형 엔진’이 나올 수 없었죠.”

이런 이유로 시즐은 인공지능 지능형 엔진 개발을 위한 언어 해독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고 있다. 시즐은 동시에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병행하면서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 협력업체는 대략 10곳 정도로, △챗봇서비스 △서비스플랫폼 △빅데이터 △사용자키워드 분석 등이 주된 업무다. 고도화된 쇼핑몰이나 보험사, 제조판매업 등이 기술 개발을 의뢰한다.

시즐은 연말께 ‘AI비서 데모’ 기술을 국내외 기업에 보낸 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공식 론칭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박 팀장 외에도 5명의 스마트



팩토리, AI전문가 등과 기술개발 및 영업에 매진하고 있다. 추후 현장에서 뛰고 있는 AI전문가를 영입해 내실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시즐의 사업성을 보고 정부 지원기관의 투자도 상당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재까지 3억5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고, 기술협력계약을 통해 1개 회사당 최대 2000만 원의 연구용역 기술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이끈 투자액만 5억 원에 이른다. 반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상당하

다. “업체가 의뢰한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개발 주제가 나온 뒤 그에 맞는 기술 프로세스를 도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차별화 포인트를 넣어야 하는지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해요. 결국 이 과정에서 고도의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죠. 말이 기술자지,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학자라고 할 정도로 힘이 드는 작업이에요. (박필석 팀장)”

박 팀장이 기술 개발에 열중한다면 회사 살림살이는 이 대표 몫이다. 평범한 청년이라면 갓 사회 초년생으로 자리매김했을 정도의 이 대표가 해내기에는 다소 무거운 중책이다. 반면 이 대표는 평범하지 않기에 더 열심히 시즐 대표로서의 일에 애착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친구들이나 가족이 걱정할 때가 많아요. 대표라는 자리가 쉽지 않을 텐데, 제품에 쓰러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도 대부분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를 꿈꾸듯 저는 그저 대학을 졸업하고, CEO로서 출발한 사회 초년생일 뿐이라고요. 저보다 더 어릴 때 시작하는 벤처창업인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하고, 그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 “범죄인인도법은 죽었다”

홍콩 최고지도자인 캐리 램(사진) 행정장관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에 대해 “죽었다(Dead)”라며 성난 민심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완전 철회’라는 언급이 없어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리 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송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사회 불안과 분노를 촉발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개정안은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요구하는 ‘완전 철회’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아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캐리 램 장관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이 다른 의미로 파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KDB생명 수석부사장에 백인균 산은 부회장 내정

백인균 KDB산업은행 부회장(경영관리부문장)이 KDB생명 수석부사장으로 내정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백인균 부회장은 이르면 이달 중 KDB생명 이사회를 거쳐 수석부사장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백 부회장은 산업은행에서 기업 인수합병(M&A), 투자금융, 사모펀드 등의 업무를 거쳤다. 이로써 산은의 KDB생명 매각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3월까지 (KDB생명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객잔산 기자 jinsan@



#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中 씨트립과 관광 활성화 협약

### 양사 CEO 2015년 이후 세번째 회동...마케팅 협력 맞춘

호텔신라가 중국 최대 여행사 씨트립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호텔신라는 8일 아시아 시장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씨트립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협력하고 논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량 씨엔장(梁建章) 씨트립 명예회장, 쑨제 씨트립 CEO,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한

인규 호텔신라 TR부문 사장 등 두 회사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호텔신라 최고 경영진과 씨트립 최고 경영진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5년과 2018년에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씨트립 본사에서 양 사의 최고 경영진이 만나 방한 중국 관광객 확대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이부진(왼쪽 네 번째) 호텔신라 사장이 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의 량씨엔장(다섯 번째) 명예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호텔신라

# 현대차 정몽구재단 ‘미래산업 인재 장학금’ 신설

### 한 해 20억 규모...대학·대학원생 170여명 지원 계획

현대차그룹 정몽구 재단이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신설했다.

9일 재단은 지능정보기술과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혁신성장 3개 핵심 분야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연간 20억 원 규모의 ‘온드림 미래산업 인재 장학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년 대학생과 대학원생 17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재단은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산업 인재 신규 장학생 5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권요규(앞줄 가운데) 현대차그룹 정몽구재단 이사장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온드림 장학생 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 LG전자, 스페인서 첨단기술 활용 나무씨앗 200만개 뿌려

### G8 씽큐·그램 노트북·드론 동원

LG전자가 스페인에서 LG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활용해 화재로 피해를 본 산림을 복원한다.

LG전자는 스페인 스타트업 ‘CO2 레볼루션’과 함께 대형 산불로 많은 나무가 타버린 스페인 과달라하라주의 알토 타호 자연공원에 약 200만 개의 나무 씨앗을 심었다고 9일 밝혔다. CO2 레볼루션은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나무심기에 특화된 스타트업이다.

LG전자는 자연공원의 상공을 비행한 드론에 LG G8 씽큐를 설치해 후면 카메라



라 3대로 씨앗을 뿌릴 지역을 정밀하게 촬영했다. LG 그램 노트북으로 LG G8 씽큐가 촬영한 데이터를 분석해 씨앗을 퍼트릴 최적의 위치와 씨앗의 종류를 정한 후 LG G8 씽큐로 드론을 조종하며 공원 내에 씨를 뿌렸다. <사진> 한영대 기자 yeongdai@

# 사노피 컨슈머헬스케어사업부 파비앙 슈미트 대표 선임

사노피의 제약사업부 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7월 1일부로 국내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대표에 파비앙 슈미트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파비앙 슈미트 대표는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거쳐 2006년 사노피 본사 재무팀에 합류했다. 2010년 아시아로 이동한 후 2016년 사노피 컨슈머 헬스케어 아태지역 재무 총괄을 거쳐 1년 만에 전 세계 90개국이 포함된 인터내셔널 지역 재무 총괄로 이동, 한국 등 90개국의 재경업무를 관장해 왔다. 유혜은 기자 euna@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강현철 ◇국장급 승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하형소 ◇과장급 전보 △고용보험기획과장 임동희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정원호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이종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김재훈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 △방위사업정책과장 윤창문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형석 △특수합사업팀장 정

재민 △국제부품계약팀장 손정은 △일반장비계약팀장 한상철 △지상유도무기지원본부 계약팀장 조용근 △기술보조과장 전주범 △기술심사과장 엄성운 △합동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조우현 △대외협력사업팀장 김상희 △전투장비사업팀장 김달원 △고속합사업팀장 박광은 △유도무기계약팀장 윤여진

◆해양환경공단 ◇본부장·실장 △지원사업본부장 이재근 △기획조정실장 김옥 △감사실장 김태근 ◇부서장·지사장 △경영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 이병구 △경영관리본부 노무복지팀장 이승환 △경영관리본부 재무회계팀장 진홍재 △해양보전본부

해양쓰레기대응센터장 송복영 △감사실감사팀장 김호수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팀장 김진서 △부산지사장 김강식 △인천 “강홍목 여여수” 배정범 △동해 “김중덕 △포항 “지동희 △목포 “최호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대표 파비앙 슈미트

◆EBS미디어 △대표이사 황인수

◆이리랑TV △시사제작팀장 한용기

◆헤럴드 △부회장 전병호

◆파이낸셜뉴스 ◇fn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이두영 △이사(부사장) 조병학 △이사 사관인찬

# 부음

▲김종대(전 대구시교육감) 씨 별세, 김윤수(전 주강로보테크부사장)·광수(피츠버그주립대 교수)·수·옥수·정수·남수 씨 부친상, 최금매·윤은희 씨 시부상, 조정석(전 대구대 공과대학장)·장광희·김유진·박영홍 씨 장인상 = 8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11일 오전 8시, 010-5256-9502

▲장병인 씨 별세, 이정순 씨 남편상, 장항배(중앙대산업보건학과 교수)·용원(메리츠화재 차장) 씨 부친상, 박익숙·정혜승 씨 시부상 = 9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

인 11일 오전 6시30분, 02-860-3505

▲천득린 씨 별세,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방훈(전 삼성전자 전무)·월희(전 목포영흥중 교사)·진희(목포마리아회고 교사)·민희(전 아이비학원 원장) 씨 부친상, 홍성근(고려대 강사)·김대중(목포제일중 교사)·현재철(솔라팩토리아노베이션 대표이사) 씨 장인상, 천지성(서울중앙지법 판사)·미성(외교부 서기관)·유현(NICE평가정보 대리)·유상(오래군대박사 과정) 씨 조부상 = 8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 02-2227-7500

중국을 지금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

센스타임 회사 내 쇼룸 전시장에 들어선 필자의 얼굴을 포착한 뒤 나이, 감정, 안경 착용 여부 등을 정확히 집어내 모니터에 나타난 것을 보고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중국은 작년보다 차세대 AI 전사, 이른바 'AI 홍위병'을 양성하기 위해 학습용 AI 교과서를 편찬하고, 전국 초중고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AI 시범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중국의 미래가 무서운 이유이다.

필자는 지난달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대되는 현장 점검을 위해 올해로 5회째 열린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아시아' 행사장을 찾았다. CES 아시아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해 중국 상하이에서 매년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첨단 IT, 차세대 혁신기술 및 관련 가전제품 박람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최첨단 ICT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CES 아시아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증강·가상현실(AR·VR), 로봇 등 혁신기술 분야 70여 개 국가, 55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기업이 대거 불참한 이번 행사에서 이목이 집중된 기업은 당연히 '화웨이'였다. 미국의 화웨이보이콧 사태 이후 화웨이의 차세대 기술과 제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년 행사와 비교할 때 확연히 기세가 약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단 부스가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었고, 5G 라우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품작이 이미 시장

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었다. 예상은 했지만 화웨이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을 의식한 듯 알리바바, 바이야디, 메이디 등 중국의 주요 ICT 및 가전 혁신기업들이 참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필자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베리실리온, 아이플라이텍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분야의 중국 혁신기업들이었다.

중국 AI 산업의 굴기는 최근 들어 더욱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다. 2018년 중국 AI 기업의 특허 출원은 3만 건으로 5년 전에 비해 10배 정도 성장했으며, 미국 기업의 2.5배에 이른다. 특히 얼굴 및 이미지 처리 등 컴퓨터 비전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1만6000건으로 미국 기업 대비 4배 이상 많다. 이러한 중국 AI 산업의 굴기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우수한 인적 자원, 막대한 자금력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은 AI를 차세대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키워드로 정하고, AI 각 영역별로 대표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1월 자율주행차의 바이두, 스마트시

티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스마트 의료 및 영상시스템의 텐센트, 그리고 음성인식 AI 플랫폼인 아이플라이텍에 이어 2018년 9월에는 안면 및 사물인식 기술 분야의 센스타임을 선정하여 차세대 AI 5대 국가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아이프라이텍의 경우 자체적으로 AI 대학 설립, 개발자대회 운영 등 다양한 AI 인적자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센스타임은 설립된 지 겨우 5년밖에 되지 않는 스타트업이지만 중국 내 유니콘 기업 중 대표 주자로 꼽히며 세계 최고의 AI 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 2800명 중 1000명 이상이 AI 전문 연구개발 인력으로 현재 딥러닝 플랫폼과 슈퍼컴퓨팅 센터를 오픈하였고, 얼굴 인식·이미지 인식·객체 인식·텍스트 인식·의료 영상 분석 등 다양한 AI 기술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AI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본 혼다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공동개발, 화웨이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협력 등 시장 수요에 맞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센스타임은 14억 중국인의 얼굴을 3초

안에 인식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회사 내 쇼룸 전시장에 들어선 필자의 얼굴을 포착한 뒤 나이, 감정, 안경 착용 여부 등을 정확히 집어내 모니터에 나타난 것을 보고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중국은 작년보다 차세대 AI 전사, 이른바 'AI 홍위병'을 양성하기 위해 학습용 'AI 교과서'를 편찬하고, 전국 초중고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AI 시범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중국의 미래가 무서운 이유이다.

최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한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센스타임이 세계 최고의 사물인식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AI 스타트업으로 최대 금액인 10억 달러를 투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적 혁신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막대한 자본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정책발언대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한의학 새로운 100년 위한 과학화·표준화

이투데이, 말투데이

전통의학은 수천 년 역사를 통해 검증된 치료의학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효능과 효과, 안전성에 대한 양질의 임상 근거 확립은 한의학 신뢰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전통의학이 직면한 과학화, 표준화의 과제를 극복하고 한의 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근거 중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침이다. 한의약 및 전통의학 분야의 근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질환에 따른 치료방법을 도출하는 프로세스에 의해 개발된다. 침, 추나, 뜸, 부항, 탕약, 약침, 한약제제 등 일선 한의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술·처방되는 의료행위와

의약품을 활용해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제3차 한의학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2020년까지 30개 임상 과제를 인준 완료하며, 2021년부터 한의 의료기관에 보급된다. 한의과대학과 의료기관, 관련 전문학회로부터 위임받은 연구자들이 대표성을 갖고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진료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한의계 발전에 큰 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견비통, 안면신경마비, 족관절염좌, 경향통, 만성요통, 요추간판탈출증, 화병, 슬통 등 8개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했고,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턱관절장애, 압관련 증상, 자폐스펙트럼장애, 편두통, 불안장애, 지속성·만성 피로, 파킨슨병, 중풍, 감기, 알레르기 비염, 현훈(어지럼증), 유방암의 보완치료, 기능성 소화불량, 고혈압, 월경통, 갱년기 장애 및 폐경기 후 증후군, 수술 후 증후군,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 치매, 수족냉증, 불면장애 등 22개 질환 진료지침을 연구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관

련 임상연구 등 한의학 분야 최신 근거를 모아놓은 '국가한의학정보센터(NCKM:National Clearinghouse for Korean Medicine)'는 한의 임상 정보 교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30개 질환 진료지침은 물론 국내외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모든 한의학 임상연구들이 NCKM에 등록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상 한의사들이 최신 진료지침 근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결정 단계에서도 진료지침 근거들이 적극 활용되어 한의학 공공보건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치료기술 발굴과 근거 창출 및 공유, 실용화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은 한의 의료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한의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표준화·산업화를 견인할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과 한약 비임상연구 시설(GLP) 또한 근거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의계 숙원사업이자 한의학 공공 인프라 핵심인 GMP, GLP는 오는 8월 건립되며, 한의학의 경쟁력, 기술력,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등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약 제제 산업 선도적으로 육성할 GMP는 임상시험용 한약 제제 및 위약, 한약 제제 원료의약품 생산과 한약 제제 전문 위탁생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SPF 청정 동물실, 세포 실험실 등 첨단시설을 갖추게 될 GLP는 한의계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한의약 안전성 확보, 국가치매관리, 한방난임치료연구 등을 지원한다.

한의학은 미래 국가 산업 블루오션으로 국민 건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친 우수 한의치료기술발굴과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GMP·GLP 공공 인프라는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된다. 한의학은 이제 표준화·과학화의 기반을 다지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립해 새로운 100년을 열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 남명(南冥) 조식(曹植) 명언
"모든 사람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 법이다."

영남학파의 두 거봉인 퇴계(退溪)와 같은 해에 태어나 퇴계는 70세, 그는 72세까지 장수했다. 퇴계가 경상좌도 사림(士林)의 영수(領袖)라면 그는 경상우도 사림의 영수로서 이 둘의 제자들이 동인 정파를 형성했다. 퇴계는 사대부의 길을 걸었으나, 그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지만 나아가지 않고 재야 지식인의 길을 선택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501~1572.

☆ 고사성어 / 화이부동(和而不同)
군자는 남과 화목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남의 의견에 동의해 무리를 지어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출전은 논어(論語) 자로(子路). 공자(孔子)가 "군자는 화합하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굽혀서까지 남의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의견에 동조하고 무리를 짓지만 화합하지는 않는다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플라시보 소비
속임 약을 뜻하는 '플라시보'와 '소비'가 결합된 말.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이 큰 제품을 택하는 '가심비(價心費)'를 따지는 소비를 말한다. '싸고 품질 좋은 제품'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비싸거나 객관적인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구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 고운 우리말 / 새물거러다
이 빠진 노인이 입 언저리를 연방 움켜쥐어 힘없이 웃다.

☆ 유머 / 아내가 만든 파스타
잠을 자는데 아내가 다급하게 깨웠다.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먹다 남긴 파스타를 먹고 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고민 끝에 말했다. "그럼 어떡하지? 경찰을 불러야 하나,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 끌어올리기'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 소득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190조 원. 하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01%(지난해 말 기준)에 그친다. 최근 5년으로 환산해도 1.88%에 그쳐 은행의 순수저축성 예금금리(1.99%)를 밑돈다. 적립금의 90%에 달하는 돈이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에 쏠려 있는 시장 구조가 낮은 수익률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운용 관

기자수첩 김나은 자본시장1부/better68@

원금보장형, 정말 원금 보장될까

계지는 "액수가 그대로 보존된다고 해서 그 퇴직금이 원금보장형은 될 수 없다"면서 "짜장면 10그릇 살 수 있는 돈이 8그릇밖에 살 수 없는 돈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진정한 원금 보장, 노후소득 증대

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신탁 형태로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고객의 성향 파악 후에

관련 상품에 투자하게 되지만, 어떤 투자 상품인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한다는 인식 때문에 제도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관련 제도의 도입도, 퇴직연금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이 '피 같은' 퇴직금을 투자상품에 맡기는 것을 꺼린다. 아직까지 사람들 인식 속에 '투자'에 따라붙는 이미지가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투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원금 보장'에 대한 집착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 2019 스페이스 오딧세이

그리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별꼴을 다 보게 생겼다. 20일은 인류가 달에 착륙한 지 딱 50년째 되는 날.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다는 방구석 음모론이 솔깃하다면 올해 여름부터는 과학뉴스에 두 귀 활짝 열어두시기를 권한다. 나부끼는 성조기나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 등 아폴로 11호 달 착륙 조작설이 그럴듯하다면 12~17호까지(13호는 아시다시피 "Houston, we have a problem") 총 12명이나 되는 우주인이 달을 밟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 정일환의 Aim High



사회경제부장

조만간 지구에 없던 갑돌 이벤트들이 펼쳐질 텐데, 여태 봐온 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쯤만 들어서는 부동산 연구소 같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는 미래융합연구본부라는 조직이 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지반열진공챔버'라는 구조물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2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우리로 같이 좀 쓰자"고 요청해온 '물건'이다. 5m 높이의 거대한 금속 공간인 이 물체는 지구에 달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실험 장치다. 온도나 기압뿐 아니라 토양까지 달에 있는 것처럼 구현한 세계 최초의 실험체로, NASA가 이미 50개나 갖고 있는 '열진공챔버'와는 '지반' 한 단어 차이다.

겨우 한 곳 차이 장치에 무려 NASA가 관심을 보인 이유는 이 차이가 달 탐사와 달 거주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NASA가 보유한 열진공챔버에서는 우주선이 섭씨 영하 190도에서 영상 150도를 오가는 우주 환경을 견디는 실험이 이뤄진다. 진공 상태도 당연히 포함된

다. 하지만 인간, 혹은 각종 장치가 땅에 닿은 상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반'이라는 두 글자가 포함된 달의 환경은 공중에 뜬 상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달은 대기가 거의 없어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지표면에 쏟아지고, 이로 인해 달의 흠먼지는 강력한 정전기를 띠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대기가 없으니 풍화작용도 없어서 흠먼 돌 한톨이 거칠고 날카로운 모양으로 생겼다. 사람이 걸어나가거나 월면차가 굴러가면 당연히 흠먼지가 날리게 되는데, 정전기를 띠 뽀족한 흠이 우주복이나 전자장비에 덕지덕지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지는 상상하고도 남는다.

건설기술연구원은 달에 있는 토양을 그대로 재현한 복제토를 자체 개발해 기존 열진공챔버에 깔아 일산에 작은 달을 만드는 중이다. 이 구조체가 성공한다면 달에도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과학계는 믿고 있다. 달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거주지가 될지의 여부가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 곧 결정되는 셈이다. NASA는 이미 성공을 전제로 계산기까지 두들겨 냈다. NASA는 "100억 달러(약 12조 원)면 7년 안에 달에 인류 거주지를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온

상태다. 10년쯤 뒤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하이퍼루프(Hyper Loop)가 등장한다. 할지도 모른다거나 아니라 낱짜만 안 잡혔을 뿐 이미 예정된 일이다. 기뻐할 일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교통혁신연구소가 이 분야에서 알아주는 선두권 주자라는 점. 건설비용도 KTX의 10분의 1이라고 하니 비행기는 지금의 초고속 유람선처럼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타는 유유자적 느낌도 교통수단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돈 없고 시간 없는 서민은 하이퍼루프 타고 29만9000원짜리 뉴욕 2박 3일 패키지나 다녀오자.

밖에 X칠하는 한이 있어도 2049년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볼 가치가 있다. 글리제(Gliese) 581C에 보낸 인류의 메시지가 답장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글리제 581C는 과학자들이 "생명체 존재 가능성 100%"라고 단언한 골드락스(Goldilocks) 지역의 글리제 항성계를 돌고 있는 세 번째 행성이다. 2008년 한 단체는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 '슈퍼 지구'로 불리는 이 행성을 향해 '지구로부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계산대로라면 2029년에 글리제 581C에 도달한다고 한다. 만약 문명을 지닌 생명체가 존재해 같은 방법으로 답장을 보낸다면 2049년에 지구에 도착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 메시지가 외계인 침공을 불러올까 우려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주전정도 가능한 고도의 외계문명이 불과 30광년 떨어진 지구를 여태 내버려 뒀을리가. 이제 2049년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생겼다. 자, 내일(오늘 아님)부터 운동이다. whan@

## 시설

###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막을 방도 있나

민간아파트에도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초강력 규제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억제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 지정요건을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반기 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택지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이자 등 가산비용, 적정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공급 감소, 아파트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커지자 2014년 적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지금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토부가 민간택지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아직 해당되는 곳이 없다. 국토부는 이 요건의 기준을 더 낮춰 분양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있다. 그러나 효과가 지속되려면 주택이 수요에 맞게 계속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를 초래해 또다시 집값을 급등시키는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수요가 넘치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포도 아파트'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시행됐던 분양가 상한제도 공급 위축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실패했다. 싸게 분양한 새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낮추는 상관관계도 검증되지 않았다. 채산성 악화로 건설회사들은 주택건설을 피하고, 서울에서 거의 유일한 신규 아파트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타격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건축 인허가 규제가 어느 때보다 까다롭다. 정부의 온갖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집값이 들쭉이고 있는 건, 공급 감소를 우려한 시장의 당연한 반응이다.

정부가 주택의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강제로 분양가를 낮춘다 해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이 크면 반드시 투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부터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분양가를 억지로 낮춰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워지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 공급이 줄고,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또 실패로 가는 길이다.

## 유현희의 뉴스 카트



유통비이오부 차장

### '뇌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트가 필요하다는 이들은 자영업자를 위한 '필요약'이라고 토로한다. 이들은 리베이트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 자영업자의 마진을 높이고 창업비용까지 지원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출고가 1000원짜리 제품을 1100원에 받는 것과 1200원에 공급받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두 박스가 아닌 수십·수백 박스라면 단순히 100원 차이로 치부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커진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1100원에 구입하는 소매상과 1200원에 구입하는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식당의 소주 가격이 대동소이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이 100원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바로 제조사다. 제조사는 몇 년에 한 번꼴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출고가격을 인상한다.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적자를 감수하기 쉽지 않다는 변명도 뒤따른다. 이들의 적자 위기의 중심에 리베이트가 있다.

대형 도매상과 프랜차이즈에 주류 제조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비단 가격 할

인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6병들이 양주 한 박스가 7병, 8병으로 둔갑하는 소위 7팩, 8팩이 존재하고 각종 판촉물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주점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오픈 시 점주에게 '주류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창업비용을 지원해준다. 이 비용 역시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 주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을 미끼로 창업자를 유혹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이지만, 그 대출금은 결국 주류 제조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다. 리베이트가 다양해지고 늘어날수록 제조사의 손실은 커지고 제조사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출고가를 올린다.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리베이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생존'이라는 단어를 꺼내든다. 주류산업협회는 리베이트를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쌍벌제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뇌물"이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국 스스로 자생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한 주류업계 인사의 쓴소리에 수긍이 가는 사람은 과연 기자뿐일까. yhh1209@



## 야유(冶遊)

"빈정대며 놀리는 말이나 몸짓"이라는 뜻을 가진 야유(揶揄) 외에도 우리말에는 같은 발음의 다른 말인 '야유'가 몇 개 더 있다. '뜰에 나가 논다'는 의미의 '야유(野遊)들 야, 노닐 유'가 있으니 야유회(野遊會)가 바로 그런 놀이 모임을 말하고, 밤늦도록 논다는 의미의 '야유(夜遊)'도 있다. 그런가 하면, '풀무질할 야(冶)'와 '놀 유(遊)'를 쓰는 '야유(冶遊)'도 있다. 국어사전은 '冶遊'를 "주색에 빠져 질탕하게 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놀고 또 놀아서 더 놀 게 없을 만큼 놀다가 시들해지자 술과 여자로 놀이(遊)에 풀무질(冶)을 해가며 질탕하게 노는 것을 야유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 마약사범에 관한 보도가 늘고 있다. 세상 살기가 괴롭다는 이유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부유층의 마약사범은 대부분 넘치도록 남는 돈을 가지고 놀고 또 놀아도 "그 놀이가 그 놀이"여서 시들하고 지루할 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여 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 결국은 마약을 투약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마약은 야유(冶遊)의 끝자락에서 맞은 시들함과 지루함에 대한 막장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야유 즉 아무리 질탕하게 놀아도 마음의 지루함과 따분함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오히려 지루함과 따분함이 더해진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계속 짜릿한 탄산과 달콤한 설탕이 들어 있는 이른바 '청량음료'만 마신다면 오히려 갈증을 더 부추길 뿐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탄산이나 설탕이 아니라 맹물이다. 맹물처럼 순수하고 무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야 갈증을 느끼지 않듯이 삶도 맹물처럼 맑고 순수하고 천진스러울 때 비로소 지루함과 따분함의 허덕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몸을 즐겁게 하는 놀이에 취하는 冶遊에 빠지지 말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수신(修身·몸과 마음 닦음)에 시간을 쓰면 자연스럽게 허덕임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행복을 맞게 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지갑을 깜빡해도 걱정없이  
**손만 대요**

통장, 도장, 신분증 필요없이  
**손만 써요**



이제부터 은행 갈 땐 간편하게  
**손만 챙겨요**



[손으로 출금 서비스]  
국내 금융사 최초, 손바닥 정맥 인증 창구 출금 서비스

손으로 출금 서비스로 당신의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b KB 금융그룹**